

의 '압승'이나 '안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대중적인 인기로 인해 얼마간 회복의 조짐이 있다곤 하지만, 자민당의 득표율은 1986년의 34.6%에서 2000년에는 20.3%로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전후 민주주의의 두 축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외부의 조건 변화도 전후민주주의체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이 일본 측에 군사적 리스크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는 자위대를 '군사화'하여 미국의 군사 리스크의 일부를 대신 부담케 하려는 것인데, 이는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헌법 9조의 개정 요구로 귀착된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 한해서 살펴본다면, 일본의 전후민주주의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변 여러 지역의 '군사적 희생'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이 본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평화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 편입되어 일본 내 미군기지의 75%를 오키나와(沖繩)에 주둔시키고, 또 한국이 일본의 전투기지 혹은 '범퍼'로서의 역할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주변 여러 지역이 군사적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일본의 전후 '평화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좀 더 단순화된 논리로 설명하자면, 한국의 엄격한 '징병제'는 일본의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젊은이들의 당연한 권리"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양석일(梁石日)이 1974년의 문세광(文世光) 사건을 다룬 소설 『죽음은 불꽃처럼』³⁾에서 주인공인 송의철(문세광)로 하여금 "일본은 너무나도 평화롭다. 평화가 평화이기 위해서 다른 희생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평화라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도록 한 것은 일본의 평화주의의 일국적 한계를 지적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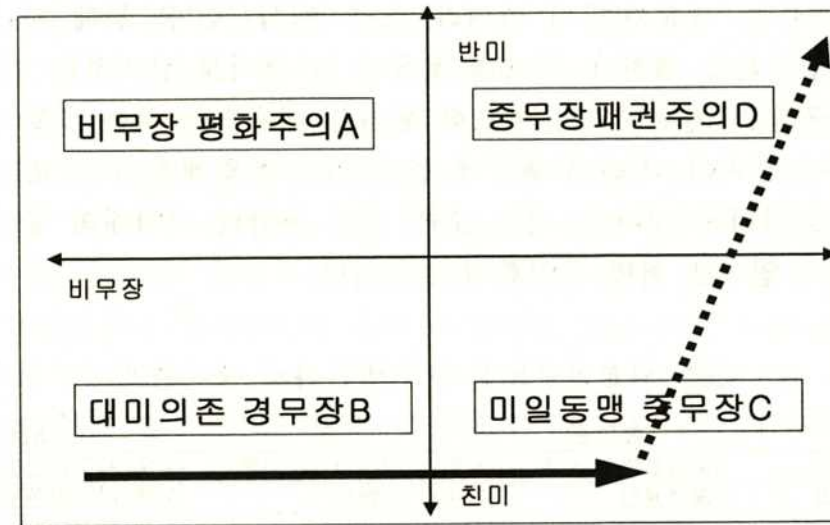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 등의 민주화로 인해 주변 지역에서 그동안의 전투기지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남에 따라 군사적 부담이 일본으로 회귀하게 되었고, 그것이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구도가 생겨났다. 한국의 반공군사독재 정권이 일본의 평화주의를 지탱하고, 한국의 민주화가 일본의 평화주의를 위협함과 동시에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시키는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일 관계가 얼마나 비대칭적인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⁴⁾

3) 梁石日, 『死は炎のごとく』 毎日新聞社

4) 나는 이러한 내용을 2003년 11월에 한국에서 행해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일본국 헌법'에 관한 학회에서 일본의 헌법학자인 키미지마 아키히코(君島東彦) 씨의 보고에 대한 나의 코멘트 속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키미지마 씨는 "오키나와·한국의 군사기지,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의 군사정권을 외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의 문제로서 보는 시점이 요구될 것이다"며 정리하고 있다(君島東彦 「NGO 平和構築が憲法の平和主義を具体化する」 『論座』 2004년 12월호, 朝日新聞社).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헌법개정 움직임과 같은 일본 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며, 또 전후 60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현행 헌법은 외교안보 노선과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또한 어떤 역사인식 속에서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1> 일본의 외교안보노선과 우경화 개념도



<주> 권혁태,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우경화」,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년 하반기, 한울, 154쪽.

일본의 전후 안보외교 노선은 이론적으로는 A.비무장 평화주의(자위대 폐지와 미일안보조약 폐기), B.대미의존형 경무장주의(자위대와 미일안보조약 유지), C.대미동맹 중무장주의(군대 창설과 미일안보조약 강화), D.대미독립형 중무장 패권주의(미일안보조약 폐기, 헌법개정, 천황 원수제)의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A를 사회당 및 공산당 등의 좌파 노선이라 한다면, B는 자민당 등의 온건 우파 노선이며, C는 친미 내쇼날리즘에 바탕을 둔 중무장 국가주의 노선이다. 그리고 D는 이른바 복고적 내쇼날리즘에 바탕을 둔 중무장 패권주의이다. 최근의 우경화란 B로부터 C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일정 부분 D로의 '탈선'가능성을 동반한다. B노선은 1950년대 중반 이후 확립되어 약 1980년대까지 일본 사회를 이끌어온 외교안보노선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A가 B의 C 혹은 D로의 지향을 막아, A의 견인에 의해 B가 유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 불고 있는 '우경화'란 B에서 C로의 지향이라 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D로의 전환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조건의 변화에 추동되는 일본의 우경화를 개념화시키면, 결국은 친미 경무장 평화주의에서 점차 친미 중무장 국가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것이 천황제 등의 복고주의적 고립주의와 맞물리게 되면 반미적 중무장 패권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헌법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1947년 헌법제정 당시는 철저한 비무장 평화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한국 전쟁 이후, 일본의 재무장이 본격화되어 자위대가 설치되자, 헌법과의 정합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명문개헌'이 아니라 소위 '해석개헌'을 통해 자위대와 미일안보조약 합헌론을 펼친다. 군사력 보유와 그 행사를 금지하는 평화헌법과 '군대 아닌 군대'인 자위대와의 기묘한 동거를 내용으로 하는 경무장 평화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따라서 최근에 불고 있는 헌법개정은 '기묘한 동거'와의 '이별'을 고하려는 것이고, 이는 오래 기간 동안의 자위대의 증강과 무력 확대를 통해서 얻어진 헌법 무력화의 결과이다.

<표> 외교안보노선과 헌법론과의 상관관계

	헌법론	주체	내용
비무장 평화주의	평화헌법의 준수	사회당/공산당 등 호헌파	자위대/미일안보조약 폐기
경무장 평화주의	해석개헌	자민당 호헌파	자위대/미일안보조약 유지
중무장 국가주의	헌법 소폭 개정	친미 내쇼날리즘	자위대 군대화 집단적 자위권 인정
중무장 패권주의	헌법 전면 개정	복고적 내쇼날리즘	자위대 군대화 집단적 자위권 인정 천황 원수제

2005년 문제의 특징

하지만 일본의 평화주의가 내외의 조건 변화에 따라 안정성이 훼손되어 최근의 우경화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2005년 문제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2005년에 들어서서 주변국과의 역사인식 문제가 어찌서 '영토문제'와 결합된 형태로 전면화되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 등의 주변국과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수차례 있었지만, 2005년 문제의 새로움은 지금까지 도미노적으로 진행되어온 자위대의 외연 확대나 헌법의 형해화(形骸化)로 대표되는 '우경화'

5) 자세한 내용은 권혁태,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우경화」 「민주사회와 정책연구」(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년 하반기(통권 8호), 한울을 참조.

의 흐름에 교과서 문제나 영토문제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전면화되었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일본의 헌법개정 등을 비롯한 우경화 노선이 반드시 역사인식의 '전환'을 필요조건으로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정부의 일각에는 1990년대 후반까지는 역사인식 문제와 우경화 문제를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듯하다. 분리 방식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해서는 사죄한다. 그러나 헌법은 개정하고 자위대는 군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1990년까지 일본의 수상이 몇 번이고 반복한 '사죄발언'은 이러한 분리 방식을 대표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의 정치적 지형이나 내외의 여론을 보건대, '우경화'의 최종 목표인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반대여론이 있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따라서 헌법개정에 필요한 정당 및 일본 국민의 '결집'이 필요하다. 게다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헌법개정을 비롯한 일련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따라서 만일 헌법개정이 정치일정에 올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타난다면, '내용' 여부에 따라서는 일본 국내에 정치적인 대치 지형이 만들어져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우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대치노선이 전쟁과 평화로 나뉘어져 자신들이 전쟁을 찬미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일본 내에서 '고립'되는 일이다. 따라서 고립을 피하고 일본 내의 유동층을 우파의 흐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을 국가간 대립의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영토문제는 주변국과의 역사인식 문제 등을 국가간 대립으로 전화(轉化)·수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소재이었던 셈이다. 왜냐하면 역사인식 등이 일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둘러싼 대립의 성격을 지니면서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이 중시되는 문제인 데 비해, 영토문제는 '국익의 완전 노출'을 통해 쟁점을 국가간의 충돌로 끌어냄으로써 '국민'의 결집을 용이하게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인화력'이 강한 현재진행형의 소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일본 내에 '주권'에 대한 위기감을 선동하는 데 적합하다. 특히 2002년에 표면화된 '납치문제'는 인권 문제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주권 침해의 사례로서 각인되어 자민당 및 일본 정부의 '현실파'의 입지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정부·지식인·미디어·시민단체의 '우파 네트워크'를 결집시키는 매개가 되었다. 이후, 우파 네트워크는 역사문제·영토문제·북한문제·헌법개정 문제를 하나의 쟁점으로 묶어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주변국을 '공생의 이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일본의 주권이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외적(外敵)'으로 간주하고, '외적'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군대로 개조하고 '힘'을 배양해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 '조용한 외교'의 파탄

전통적으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서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계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일 외교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은 기능하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을 경유한 '안보적 판단'이나 자본 측의 '실익적 판단'이 우선되었다. 또한 역대 한국 정부는 민중의 가슴 밑바닥에 잠재하고 있는 '반일 정서'를 경제 발전과 '국민통합'의 한 수단으로서 이용해 왔다. 그리고 '민중의 요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배상이나 보상이 따르지 않는 '사죄발언'을 일본에게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에서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사죄발언'의 수준이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소'되어 왔다. 따라서 식민지 민중의 피해를 은폐·축소·억압하는 데 가담해온 역대 한국 정부도 역사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식민지 지배의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안보적 판단'이나 '실익적 판단'에서 역사문제를 이용하는, 지금까지의 대일 외교의 골격이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은 한편으로는 한국 국내의 문제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정부의 역사적 공범관계를 폭로하는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식민지 경험 지역의 안티 테제라는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대일 외교의 '민주화'와 '투명화'는 일본 정부로서도 한국 정부로서도 적지 않은 리스크가 따른다. 왜냐하면 독재정권 하에서 잠재해 있던 역사문제가 일거에 분출해버리면, 한일 관계에 금이 생겨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내용으로 하는 한·일·미의 삼각체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초기에 일본의 일부 언론 등이 노 대통령의 대일 및 대미 외교 방침의 전환 가능성에 관해 이례적인 우려를 나타내며 '당혹감'을 표시하거나 '동북아시아 질서의 불안 요소'라며 소란을 피운 것은 노 정권의 등정이 반공독재 정권 하에서 억제되어온 역사문제를 분출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의 수직적 계열에의 편입을 한국이 전략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직적 계열로의 편입에 의해 향수해온 일본의 '기득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

기 때문일 것이다. '기득권'의 위기에 대한 일종의 반동인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얼마나 과거 질서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가, 또 얼마나 새로운 질서 만들기에 불안을 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역사문제와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군사 대국화' 문제를 분리하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하기 시작한다. 역사문제에 '망언'이 없다면 일본의 헌법개정이나 자위대의 외연 확대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2002년 3월 16일 일본의 카와구치(川口)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과거문제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협력이 역사문제에 우선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영토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직된 상태에 있던 올해 3월 23일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라는 성명에서 '조용한 외교'의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자위대 해외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이제는 재군비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서 고통스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이 사과하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선언한 마당에, 보통의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국가의 권능을 일본만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아왔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한 노 정권으로서도 아무리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문제 삼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대북 관계에서 일본 등의 주변국의 협력을 무시할 수 없는 한국 정부로서는 역사문제와 군사화의 움직임은 분리하는 방식은 한일 관계의 '연착륙(軟着陸)'을 위한 '고뇌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의 '영토문제'는 역사문제와 군사화의 움직임을 잇는 매개물의 역할을 한 셈이 된다. 한국 정부는 '영토문제'를 통해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어쨌든 영토문제에서 양국 정부의 '본심'이 일거에 드러나고 영토문제가 교과서 문제 등의 다른 문제로 불꽃이 옮겨가는 등, 최근의 한일 관계는 일종의 '치킨 게임'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연대'를 규정하는 것

지금까지의 국가간 관계는 정보·사람·상품·돈의 국가간 이동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이러한 자원을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배분·조절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중요한 소재로 삼아왔다. 특히 국가 주도의 발전전략의 경향이 강했던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현저했다. 상품이나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이나 외환규제를 통해, 또 서적·신문·대중문화 등에 대해서는 정부나 일부 기관이 검열·여과하는 형태로, 노동력 이동은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나 신분검사를 통해 국가가 조절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일본관은 단편적으로 접하는 정보를 국가의 발전전략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거나 혹은 가공된 정보를 개인의 기억·체험·전승에 의해 재가공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사회에서도 한국사회에 관한 정보는 일부의 사람에 의해 매우 제한된 형태로 일본으로 유입되었으며, 따라서 일본사회의 한반도 인식은 일본사회의 현실과 방향성에 맞추어 가공·침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두 사회에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 독점·국가 가공(加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제적 시민 연대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성립이 반드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국제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독점 하의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는 당연히 '보편적 이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김옥균 등의 '갑신정변'(1884년)으로 대표되는 '급진개화파' 이래의 연대와,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자의 연대는 각각 '근대화'와 '사회주의'라는 보편적 이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념형 연대는 각각의 지역이 놓여있는 현실을 '근대화'나 '사회주의'라는 보편적 이념으로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을 통해 '국제연대'를 보편이념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통로'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다. '근대화'의 흐름은 차치하더라도, 카라타니 코진(柄谷行人)의 말을 빌리자면, 원래 '국가의 양기(揚棄)⁶⁾를 목표로 삼고 있었을 터인 사회주의라는 이념도 운동이라는 현실에서는 국가나 민족이라는 틀에 용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근대화'나 '사회주의'라는 보편이념이 그 교과서적인 원리와는 달리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가나 민족을 기본 전제로 하여 출발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전후 세계에서 '연대의 사상'이 국가나 민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없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6) 柄谷行人 「インタビュー「一九四五年」と「二〇〇〇年」」 『世界』 2005년 1월호.

말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전후 '근대화'의 이념은 '자본주의화'라는 이름으로 한일 양국 정부 간의 흐름으로, 또 사회주의의 이념은 한일 민중 연대, 혹은 조일 연대의 흐름으로 각각 흡수되었는데, 이 흡수가 '국가'라는 틀의 재구축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흡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튕겨나오는 문제가, 혹은 새로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자각은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하기에 이른다. 특히 일본에서는 1960년대 이후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하여 일본이 역사적으로 가해자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해자로서의 위치가 전후에 계승되어 전후 일본의 번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각의 조짐이 일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각의 조짐은 일본의 번영이 아시아, 특히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의 '희생' 위에서 성립된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문제제기=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원 연대는 곧 일본사회의 과거와 현재에 걸친 비판적 문제제기이기도 하다는 깨달음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자각의 단서가 탈민족·탈국가적인 지향성을 갖고 '국경'을 뛰어넘으려는 문제의식으로 귀착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 이념이 국가나 민족이라는 틀로 인해 더 이상 국제연대의 사상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현대 일본의 '현실'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자각을 통한 연대 사상의 흐름은 일정 부분 사회주의적 국제 연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를 동반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해방 후의 한국에서는 '근대화'(=자본주의화)의 이념이나 통로를 정부가 독점함으로써 민간 수준에서의 근대화의 이념이나 통로조차도 정부의 관리 아래에 놓인다. 당연히 해방 전에 존재한 다양한 '국제연대'의 사상, 특히 사회주의적 연대의 사상은 분단과 철저한 반공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남부에 갇힌 한국의 사회운동은 '근대화'의 정부독점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근대화'의 완성(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하거나 혹은 '잃어버린 또 하나의 세계'인 사회주의로의 이념적 편향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는 '국제연대'의 사상은 '민족국가'의 완성을 위한 외부 지원의 하나로 받아들여져 '한국'이라는 '통로'에 의해서만 국제연대를 자리매김 시키게 된다. 특히 사회주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내부분열과 '내적 성찰'(예컨대 스탈린이즘, 중·소 이념분쟁, 신좌익의 등장 등에서 발생한 '고통')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회운동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운동이 사회주의적 패권주의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내적 계기를 갖지 못한다.

결국 일본의 사회운동이 탈국가·탈민족으로의 지향이라는 새로운 사상적 자각 속에서 국제연대를 자리매김 시키려고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그것은 '민족국가의 완성'이라는 운동 목표 속에 국제연대를 자리매김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새로운 조건과 '연대'의 새로운 구축을 위하여

냉전이 해체된 후, 동북아시아에서는 유동화·액상화(液狀化)가 계속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다음과 같은, 얼핏 보기에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두 가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전개이며, 다른 하나는 내셔널리즘적 경향의 강화다.

그러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전은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향한 편성이라는 문제를 지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0세기를 지배해온 고립적 근대국가의 경계의 벽을 약화시켜 국가간 관계가 정부 대 정부에 그치지 않고 민간 대 민간, 혹은 개인 대 개인이라는 '탈정부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가져다주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국제교류에 필요한 비용이 급속하게 경감되고, 무차별적 교류가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어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의 정부독점 체제가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현저하다. 여행, 유학, 기관 교류, 청소년 교류, 학회간 교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민간교류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면 일목요연하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일본어를 학습하는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일본관련 학과는 100개교, 중국관련 학과는 약 50개교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3국간의 교류를 위한 학습 기반은 일단 한국에서는 양적으로는 정비되어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공교육, 거대 미디어, 정부 등에 독점되어 있던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엮가로, 게다가 리얼타임으로 손쉽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체제와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상대의 정보를 '자신의 의사'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일 관계의 주역이 '식민지 경험 세대'나 '이념형 세대'에서 '탈역사·탈이념 세대'로 옮겨가, 정보독점이나 두 사회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초한 연대나 교류가 연대의 메카니즘으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생활형'이나 '개인형'이라 명명한다면, 생활형 및 개인형 교류는 구체적 접촉을 통해 획득한 상대에 대한 이미지가 정보독점과 이념형 교류에 의해 형성된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수

정·보완하거나, 더 나아가 대립·충돌하는 경우를 종종 발생시킨다.

따라서 냉전체제 하에서 위로부터 부여된 정보에 기초하여 배양된 일국주의적 세계관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기대는 자신을, 특정한 국가에 종속된 부속물로서가 아니라 보다 넓은 단위,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를 구성하는 개인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도 국가를 넘어설 수 있는 지역주의적 접근의 조건이 점차 힘을 얻어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의 기반이 된다. 냉전 해체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국 중심의 역사서술의 약화를 가져와, 최종적으로 '역사의 비국가화'로 귀결된다는 주장이나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 등은 21세기의 동북아시아가 스스로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서 '사고'하려는 새로운 모색의 전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현실은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 동북아시아 3국은 경제 및 문화교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대립적 세계관을 국가라는 틀을 통해 오히려 더욱 강화하려는 흐름이 힘을 얻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대개 '내이션 빌딩(nation-building)' 혹은 '국가 아이덴티티'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민간 교류의 확대가 국가 경계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환상인 듯이 여겨진다. 특히 최근의 '역사의 기억'이나 '영토'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은 경제 및 문화교류가 반드시 동북아시아 3국의 평화와 공존의 기반에 직결하는 것이 아님을 새삼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역사나 영토를 둘러싼 국가간 대립은 얼핏 국가의 틀로부터 자유로운 듯이 보인 각 지역의 시민사회를 일거에 국가라는 틀에 회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⁸⁾. 따라서 최근의 한일 관계는 국가나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교류'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교류 연대'의 모델을 만들 필요를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따라서 국제연대를 하나의 규범적인 이념으로 묶을 수 없게 된 현실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만남의 축적이 국경의 벽을 낮추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국가간의 충돌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모든 공간·시간·영역에서의 '만남'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친선 교류에서 벗어나, 쟁점별로 구체적인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통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만남'으로 전환되어야 할

7) 入江昭 「一國中心の歴史をこえるために」 『世界』 1994년 1월호.

8) 예컨대 2004년에 일어난 고구려사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은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단지 '일본문제'로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서 확산될 수 있는 문제임을 환기시켰다(권혁태, 「고구려사 문제와 일본의 동북아시아 인식」 『황해문화』 2004년 겨울호).

것이다. 예를 들면, 교과서 파동을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간의 연대나, 혹은 동북아시아 균축을 위한 모델 만들기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구체적 사업을 통한 연대의 경험과 그 성과 위에서 비로소 새로운 연대의 사상이 담보된다는 새삼스러운 교훈을 확인한다.

On Historical Perceptions

Akira Izumisawa, Attorney

1. The contemporary nature of the historical perception issue

To China, South Kore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the issue of how to assess the period of history from Japan's modernization and adoption of imperialism, which start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to the end of the Asia-Pacific war in August 1945, is seen as a real and unavoidable problem, an "issue of historical perceptions."

In the spring of 2005 this issue unexpectedly became a major topic that made a splash in the media with the news reports on South Korean criticism of Japan over the Takeshima (Dokdo) issue, and the criticism from China, which developed into huge anti-Japan demonstrations, that erupted over Prime Minister Koizumi's visit to Yasukuni Shrine and the history textbook issue. Especially the large anti-Japan demonstrations, which appeared daily in Japanese media, gave the impression that Japanese-Chinese relations are the worst they have been since the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72.

The tone of media reports on the anti-Japan demonstrations was by and large the view that "the cause is the anti-Japanese and patriotic education by China's government," and not a few commentators asserted that the recent anti-Japan demonstrations were by the citizens and government working together. Owing to the circumstances, even those commentators who had until then exhibited a measure of understanding for the historical perception issue were obliged to speak from a position that was critical of the demonstrations' violent nature. The treatment of the issue on these programs indicated the perception held by the majority of Japanese, in which they ask, "Why are China and South Korea so obsessed with the war?" and "What's the use of this obsession with the past?" but do not get into the historical facts of Japan's aggression and colonial rule. And behind that mentality is the deeply ingrained Japanese perception of history, expressed as "It's true Japan's wartime actions couldn't exactly be called good, but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at the time it couldn't be helped, and at the least, there's no reason to continue questioning a country's responsibility even several decades after the war."

There is a very wide, deep, and difficult-to-bridge gulf between this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Japanese, and that of the people of China and South Korea, where many of the citizens still see the harm they endured from the war of aggression and colonial rule as quite real, and where the educational systems pass this on to following generations.

But now this historical perception issue can no longer be brushed off as just a difference in national awareness. This is because, as anti-Japanese demonstrations exhibit a groundswell, even people other than those who have unambiguously called for amending Article 9 and making the SDF into an official military now claim that this situation has arisen because Japan does not, as it should, use military force to boldly cross swords with China and South Korea. Such is the extremist violent nationalism that now struts with impunity across the political landscape. Talk like this is not limited to a handful of experts, but is writ large in general magazines and other publications, which at least 10 years ago was unthinkable. But owing to factors including the economic rise of China and South Korea and the trend toward relative economic decline in Japan, and the growing influence of right-wing politicians who take advantage of the North Korean issues of nuclear weapons and abduction of Japanese, over the last few years a wariness toward the situations i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has percolated down to the general public. Then came the recent criticism of the Japanese

government by the South Korean and Chinese peoples, which stemmed from the historical perception issue. This shows how Japanese journalism has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 Now we have a situation in which people who used to be regarded as right-wing commentators make appearances as intellectuals presenting very common-sense points of view, and even saying things like "having a military by amending the constitution is the basis for giving Japan a say in East Asia."

In this sense the historical perception issue has already passed far above the level of differences in national awareness, and has become a very concrete and real danger to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Let us explore the origin of this gulf dividing historical perceptions, and why it has not been bridged.

2. Atoning for the war, and calling for an accounting

A greatly simplified description of Japan's foreign policy from its modernization in the Meiji period (1868-1912) until August 1945 would be: an imperialistic hegemonic policy achieved through becoming a military power with the emperor at the center. After Japan gained a foothold on the Asian continent following the Sino-Japanese War and Russo-Japanese War, it created a colony of the Korean Peninsula, pursued military aggression in China and defiantly established the state of Manchukuo, and — sparked by the war against the US and UK — tried to expand its hegemony to Pacific nations. But this foreign policy ended with defeat in August 1945.

With defeat, Japan gave up its colonies, Hideki Tojo and a few other Cabinet members and military officials were prosecuted and punished as war criminals in the Tokyo Tribunal, and GHQ completely dismantled the remaining military apparatus. Japan's constitution, which took effect two years after the war, says in its preamble, "resolved that never again shall we be visited with the horrors of war," and Article 9 expressly states that the Japanes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at Japan will not maintain a military force. This was the birth of the "peace constitution," and it was here that Japan totally negated its past militarism and was reborn into a democratic state whose keynote is pacifism. Article 9 in particular signified a declaration to Asian countries harmed by the Asia-Pacific war and colonial rule that Japan would never again become a country that could make war.

But what about the issue of Japan's war responsibility? What was done about the responsibility for the human loss of as many as 20 million lives — far more than Japan's own loss of 3.1 million — and the astronomical economic loss incurred by Asian countries?

The parts of Asia that suffered especially heavy casualties from Japan's war of aggression and colonial rule were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yet Japan's war responsibility there has never been the subject of thorough inquiry from third countries or the subject of active inquiry from the Japanese themselves. Even now, nothing has changed.

While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the biggest real reason was a change in GHQ occupation policy. In the second half of the 1940s the Cold War had already divided the world into East and West, but in East Asia a "hot war" broke ou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previous year a communist government was created in China. To the US occupation forces, Japan was more important as a military stronghold in Asia than as a country of peace and democracy. For that reason there was a sudden change in which the communists, who had been reinstated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found themselves purged, while on the other hand those who held power during the imperialist years, and who

had been banished from public office, found themselves reinstated. Thus, inquiry by third parties into war responsibility was frustrated by the intentions of GHQ.

But assuming that Japan had been democratized by popular sovereignty, it should not have been impossible for the citizens themselves to actively inquire into war responsibility. There were in fact sincere people who faced their own war responsibility, and who inquired into the war responsibility of the generation which cheered on the war. But those people were very few in number. In reality, most of the people, including those who were the advance guard of aggression and invaded other countries, were not in a position to do anything because of economic distress brought on by defeat.

And more than anything else, the biggest factor that absolved the average Japanese from the duty to face their war responsibility was the immunity given to the emperor, who had the greatest responsibility in imperial Japan. When the majority of Japanese accepted the peace constitution, which said that Japan would never again go to war, they also accepted the emperor, who had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aggression and war, as "the symbol of the State and of the unity of the Peopl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It is nearly impossible for a people who cannot ques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with the greatest war responsibility to face their own war responsibility. Here is the ultimate reason for the stance of the Japanese people, who cannot go all the way when inquiring into responsibility for the war. In that sense, even though the constitution sets forth noble principles such as pacifism, respect for basic human rights, and popular sovereignty, the document is limited when it comes to inquiring into war responsibility.

Hence for several years just after the war, when East Asian countries should have immediately tried to get an apology and reparations, Japan was conveniently delivered from this by chaos in those countries that was induced by revolution and civil war. As a result, Japan was reinstated to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occasion of the 1951 San Francisco Treaty without a serious accounting of its war responsibility by either other countries or itself.

3. Development and limitations of the postwar peace movement

After the war, Japan became a supply base for the US military in the Korean War and Vietnam War, while economically it grew into one of the world's large economic powers, approaching the US, thanks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that began in 1960, the year that the Japan-US Security Treaty was revised. Further, in the 1960s and 1970s there was significant growth of a movement critical of government policy. In particular, the leftist Socialist and Communist political parties, and the labor movement, primarily the General Council of Trade Unions of Japan, formed the nucleus of a broad-based domestic peace movement which accordingly grew in strength, and the anti-nuclear weapons movement gradually came to have a voice for being "the only atomic-bombed country" because of Hiroshima and Nagasaki. These movements, which have been supported by those known as the peace camp, have on a number of occasions stopped government machinations to amend the constitution and its efforts to make the SDF constitutional.

But even if these Japanese movements for peace and protecting the constitution were at the core based on a view of the war in which Japanese themselves were victims and caught up in the war, they were never based on the view of war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who were victims of the Japanese, i.e., a view of war in which the Japanese as the aggressors. Of course at that time the situation in Asia did not allow the general public to move about freely, making it objectively impossible for victims and aggressors to have personal interaction.

Nevertheless, over several decades since the war's end, the silent prayers offered throughout Japan every August 15 are meant for the Japanese soldiers and civilians who died in battle or of disease in other lands, and to the fellow Japanese who died in Japan from American air raids and atomic bombs. It was never possible that prayers would be offered to the innocent people in other Asian countries who were killed at the hands of the Japanese.

Thus for the many years after the war, the vast majority of Japanese people have continued enjoying peace and economic growth without questions about basic war responsibility, without being able to question it themselves, and without even being abl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war responsibility.

4. Objections by Asian peoples, and the rise of revisionist public opinion

But in the 1990s there was a great upwelling among the peoples of Asia, with calls for a new accounting of Japan's war responsibility, taking forms such as lawsuits seeking postwar reparations. A major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eoples of Asian countries that had until recently been in chaos due to civil strife and revolutions were finally able to personally appeal to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eople thanks to relative democratization and a certain amount of economic growth after the Cold War ended, and to other factors including the globalization of communications. Many victims of Japanese imperialism have made themselves heard across the sea in calling to account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has still to admit its responsibility. These people include victims of abduction and forced lab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known by names such as "comfort women," and people whose families were murdered. They come from South Korea, China, Taiwan,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But these calls for an accounting of Japan's war responsibility by Asian peoples, whom Japan could ignore for some decades, have elicited bewilderment and rejec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eople, who have considered the issue of war responsibility to be over and done. Until now, even if abductions and comfort women appeared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such material was never actively presented as living history. And since the mid-1990s we have seen the rise of a camp which attacks the movement for inquiring into Japan's war responsibility, calling it "a masochistic view of history." This camp subsequently launched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and with a certain amount of backing from politicians and business, it has promoted the writing of textbooks that whip up revisionist nationalism and deny Japan's war responsibility.

Currently, the leading figures in Japan's government and governing party complain publicly about abductions and comfort women appearing in history textbooks, while people such as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and Metropolitan Tokyo Governor Shintaro Ishihara, despite sharp criticism from China and South Korea, make nearly annual visits to Yasukuni Shrine, which is well known as a symbol of Japanese militarism that enshrines war criminals. Such actions by politicians is accepted by most Japanese.

Although it did not go far enough, the 1995 media statement by Prime Minister Murayama was applauded at the time for showing an awareness of and contrition for Japan's war responsibility. But the statements and actions of subsequent prime ministers and Cabinet members, as noted above, gave East Asian countries the strong suspicion that Japan after all has no true awareness of its own war responsibility, and this elicited strong anger from among the populace. Throughout the whole postwar period Japan has never admitted the fact of its war of aggression or made a sincere apology to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to East Asians including those i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never taken

corresponding action. This has created the situation we now have: Japanese with no awareness of their war responsibility, and other East Asian peoples with still fresh and unbearable memories as victims. It is a relationship which makes mutual understanding impossible.

In that sense, the gulf in historical perceptions between the Japanese and other East Asians is a product of the Japanese stance of avoiding war responsibility, which has been consistently held from war's end until now. As long as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assuming this stance and the Japanese people continue to allow it, the historical perception issue will continue to be a smoldering matter of serious concern in East Asia.

5. The historical perception issue and building peace in East Asia

If nothing changes, future deterioration of relations between Japan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owing to the gulf between historical perceptions will be unavoidable. A certain amount of domestic support has accrued to the extremist position that Japan should not rule out a hard-line attitude, backed by military strength, against East Asian countries that continue their obsession with the historical perception issue. Of course many Japanese do not want a war in the Far East, and the government at present does not believe that Japan alone could direct military power against other East Asian countries.

But the greatest concern at this point is this: There is no proof at all of a specific danger arising because relations with other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destabilized by the historical perception issue, yet public opinion is being shaped to allow amending Article 9 of Japan's constitution and military action in concert with the US by invok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tone of the Japanese media and the alignment of political camps shows this to be a very real possibility, and in fact efforts to accomplish it are underway.

At this point in time, 60 years after the war,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resolve the historical perception issue all at once, seeing that a solution has eluded us all these years. But this issue is the foundation for building peace among East Asian nations, and if we aspire to true peace, the issue must be resolved. The first thing we Japanese must do is become aware of this.

歴史認識問題について

弁護士 泉澤 章

1 歴史認識問題の現在性

中国や韓国など東アジア諸国にとって、19世紀後半に始まる日本の近代化、帝国主義化の時代から、1945年8月のアジア太平洋戦争終結までの歴史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のかという問題は、「歴史認識問題」として、避けて通ることのできない現実的課題の一つ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

そして、2005年春、この問題は、図らずもマスコミを賑わす大きな話題の一つとなった。いわゆる「竹島問題」にあらわれた韓国の対日批判と、小泉首相の靖国参拝や歴史教科書問題をきっかけに、大規模な反日デモにまで発展した中国の対日批判に関する報道がそれである。とりわけ、日々日本全国に配信された反日デモの報道は、1972年の国交回復以来、日中間の関係が最悪の状態になっていることを日本中に印象づけた。

この反日デモに対するマスコミ各社の論調は、「中国政府が行なってきた反日愛国教育が原因」という見方がほぼ大勢であり、「今回の反日デモは、官民一体で行なわれたものだ」とまで断言する論者も少なくなかった。これまである程度歴史認識問題に理解を示してきた論者たちも、反日デモの暴力性を批判する見地から話をすすめるを得ない状況にあった。そして、これらの番組における問題の取り上げ方は、日本における大多数の国民の問題意識をあらわしていた。すなわち、歴史的事実としての侵略や植民地化の問題に踏み込むまでもなく、そもそも「中国や韓国はなぜ未だに戦争のことにこだわるのか」「そんな昔のことにこだわっても今更しょうがないではないか」という意識である。そしてそのような意識のさらに根底には、「戦前の日本の行いが良かったとまでは言わないまでも、当時の特殊な状況では仕方がなかったのだし、少なくとも敗戦後数十年経ってまで、他国に責任を問われるようないわれはない」という抜きがたい国民の歴史認識が存在する。

このような日本国民の歴史認識と、国民の多くが未だ侵略戦争や植民地支配によって受けた傷を現実のものとし、教育によって次代へも引き継いでいる中国や韓国国民の歴史認識との差はあまりに大きく、深い溝を埋めることは困難である。

しかし、今この歴史認識問題は、単なる国民意識の差などという問題だけではすまされないところまで来ている。反日デモが盛り上がるなか、いままで9条改憲と軍隊の正式化を明確に唱えてきた勢力以外にも、「日本がきちんと武力をもち、堂々と中国や韓国と渡り合わないからこのようなことになるのだ」といった、極端に暴力的なナショナリズムが大手を振ってまかりとお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からである。このような論調が、ごく限られた専

門家間の議論ではなく、一般的な雑誌等で大々的に掲載されることなど、少なくとも10年前には考えられなかった。ただ、中国や韓国の経済的台頭と日本の相対的地盤沈下傾向、北朝鮮核問題や同じく北朝鮮による拉致事件とこれを利用して発言力を強めてきた右翼的政治家の影響などにより、中国や朝鮮半島情勢に対する警戒心はここ数年来、一般市民レベルに浸透している傾向はあった。そしてそこに、今回の歴史認識問題を原因とした韓国や中国の民衆による対日本政府批判が加わ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情勢において日本の論壇は、かつてと比べてみてもほとんど様変わりに近い様相を呈している。そこではかつて右翼論客と見られていた論者が極めて常識的な話をする知識人として登場し、改憲によって普通に軍隊を持つことが東アジアにおいて発言力を有するための基礎になるとまで言うような状態が生まれているのである。

その意味で歴史認識問題は、すでに国民意識の違いというレベルをはるかに超えて、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に対する極めて具体的かつ現実的な危険要因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

それでは、どうしてこのような歴史認識の溝が生まれ、今もその溝は埋まらないのだろうか。

2 日本の敗戦処理と戦争責任の追及

明治期の近代化以降1945年8月に至る日本の対外政策を極めて単純化していうとすれば、それは、天皇を中心とした軍事大国化による帝国主義的覇権政策であった。日本は、日清・日露戦争後大陸への足がかりを築いて以降、朝鮮半島においては植民地化を進め、中国大陸においては軍事侵略と「満州国」建国を強行し、更に米英諸国を相手とした戦争をきっかけに、太平洋諸国にまで覇権を上げようとしたのである。しかし、このような日本の対外政策は、1945年8月の敗戦によってピリオドを打つこととなった。

敗戦により、日本はかつての植民地を放棄し、東条英機など一部の閣僚や軍人は極東軍事裁判において戦犯として訴追を受けて処刑され、GHQ (General Headquarters、連合国の総司令部を意味する。)は残存する軍事機構を徹底的に解体した。そして、敗戦より2年後に発効した日本国憲法は、その前文で、「再び戦争の惨禍が怒る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更に本文9条では国権の発動たる戦争を放棄し、戦力の不保持を明文化した。いわゆる「平和憲法」の誕生である。ここにおいて日本は、過去の軍国主義を徹底的に否定して、平和主義を基調とする民主主義国家に生まれ変わった。特に憲法9条は、アジア太平洋戦争や植民地支配で被害を受けたアジア諸国に対して、日本は二度と戦争ができるような国家にはならないと宣言する意味を持った。

それでは、日本の戦争責任問題はどうなったのか。特に、自国民の犠牲者310万人をはるかに超えるおよそ2000万人ともいわれる人的被害と天文学的な経済的損失を与えたアジア諸国に対する戦争責任問題はどうか処理されたのか。

日本はアジア諸国のなかでも、とりわけ、侵略戦争や植民地的支配の犠牲者が多かった中国や朝鮮半島の住民に対する戦争責任について、他者から徹底的に追及されることも、国民自らが積極的に追及することもなかった。そしてその状態は、現在まで引き継がれている。

それにはいくつかの理由があるが、最も大きな現実的理由は、GHQによる占領政策の変化であった。1940年代後半からすでに東西陣営による冷戦は顕著となっていたが、東アジアでは朝鮮戦争という「熱戦」が勃発し、その前年には中国で共産党による政権が誕生するという事態が生じていた。アメリカ占領軍にとって重要なのは、平和で民主的な日本よりも、アジアにおける軍事拠点としての日本であった。そのため、民主化の過程で復権した共産主義者が一転パージされ、公職を追放されていた帝国日本時代の実力者たちの方が、反対に復権してきたのであった。こうして、他者による戦争責任の追及は、GHQの思惑によって頓挫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しかし、仮にも日本が国民主権のもと民主化したのであれば、国民自らが積極的に戦争責任を追及することは不可能でなかったはずである。実際にも、自らの犯した戦争責任に向き合い、また、戦争を鼓舞した世代の戦争責任を追及する真摯な人々は存在した。しかし、それは絶対的に少数であった。大多数の国民、それも自らが侵略の先兵となって他国を侵略した国民は、敗戦による生活苦への対応でそれどころではないというのが現実であった。

そして、何より一般の日本国民をして、自らの戦争責任に向き合うことを免責させた最大の理由は、他ならぬ帝国日本の最高責任者である天皇の免責であった。大多数の日本国民は、二度と戦争はしないという平和憲法を受け入れたのと同時に、侵略と戦争の最高責任者である天皇を、「日本国民統合の象徴」(日本国憲法第1条)として受け入れたことであった。戦争の最高責任者の責任を問えない国民が、自らの戦争責任について向き合うことなどおおよそ不可能である。戦争責任をとことんまで問いつめない日本国民の姿勢は、結局はこのことに由来するといえる。その意味で、日本国憲法は、平和主義、基本的人権の尊重、国民主権といった崇高な原理を唱えつつも、戦争責任の追及という点では、限界を有していたといわざるを得ないのである。

こうして、日本敗戦直後の数年間、本来なら真っ先に謝罪と賠償を追及して来るべき東アジア諸国が、革命と内戦とで混乱しているという客観的な情勢にも助けられ、日本は徹底的に戦争責任を問われることも又自ら問うこともなく、1951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締結を契機に、再び国際社会へと復帰してゆくのである。

3 戦後平和運動の発展とその限界

敗戦後の日本は、朝鮮戦争やベトナム戦争においてアメリカ軍の兵站基地となり、経済的には日米安保条約改定の1960年から始まる高度経済成長によって、アメリカに迫る世界有数の経済大国へと成長してゆく。そして1960年代から70年代にかけては、政府の政策に批判的な運動も大きく成長していった。特に、社会党や共産党という左翼政党、そして総評を中心と

した労働組合運動を中心に、国内では広汎な層の平和運動がそれなりに力を有し、広島、長崎を有する「唯一の被爆国」としての反核運動も徐々に発言力を有してきた。平和勢力と呼ばれる人々によって担われてきたこれらの運動は、これまで幾度かなされてきた日本政府の改憲策動、自衛隊合憲化の動きを食い止めてきた。

しかし、これら日本の平和運動や護憲運動の中核は、日本人自身が被害者となる戦争、巻き込まれる側の戦争観にたったものではあっても、日本人から被害を受けた人々の目線にたった戦争、つまり、「加害者としての日本人」をもとにした戦争観にたったものでは決してなかった。もちろん、このころのアジアを取り巻く情勢は、民衆レベルで自由に行き来することが可能な状況ではなく、その意味で被害者と加害者とが互いに交流することなど客観的に不可能ではあった。しかしそれにしても、敗戦から数十年間、毎年8月15日に日本中で捧げられる黙祷の対象は、異国の地で戦闘や病気で死んでいった日本の軍人や民間人に対してであり、国内における米軍の空爆や原爆で死んでいった「同胞」に対してであっても、決してアジア諸国において日本人の手によって殺されていった無辜の民衆のためではありえなかった。

こうして、敗戦後から長い間、根本的な戦争責任を問われず、自らも問い得なかった大多数の日本国民は、戦争責任の意味さえ理解できないまま、平和と成長を享受し続けてきた。

4 アジア民衆による異議申立てと復古的世論の台頭

ところが、1990年代に入り、日本の戦争責任を再び問い直す声が、戦後補償裁判などのかたちをとって、アジア諸国の民衆レベルで続々とわき上がってきた。これは、これまで内戦や革命で国内が混乱していたアジア諸国の民衆が、冷戦終結後の相対的民主化と一定の経済成長、そして情報通信のグローバル化などによって、ようやく自分たちの声で日本政府や国民に訴えか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が大きな要因であった。韓国、中国、台湾から、そして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から、強制連行・強制労働を強いられた被害者、「従軍慰安婦」などと称される性暴力被害者、家族を虐殺された人等々、多くの日本帝国主義による犠牲者が、未だその責任を認めない日本政府を追及するため、国境を越えて声をあげてきたのである。

しかし、戦後数十年間、これまで無視してくることできたアジア民衆による日本の戦争責任追及の声は、すでに戦争責任問題を過去の問題としてきた日本政府と大多数の日本国民に、戸惑いと拒否反応をもたらした。日本においてはこれまで、強制連行や「従軍慰安婦」が歴史教科書に登場することはあっても、それを生きた歴史として教えることが積極的に推し進められたことはなかった。更に90年代中盤以降は、日本の戦争責任を追及する運動に「自虐史観」というレッテルを貼って攻撃する勢力が台頭してきた。この勢力はその後、「新しい教科書をつくる会」を立ち上げ、政財界における一定の力を背景に、復古的ナショナリズムの高揚と、日本の戦争責任を否定する教科書づくりを推し進めていった。

現在、日本の国内には、政府や政権党の主要人物が、強制連行や「従軍慰安婦」が教科書に載ることに公の場で苦言を呈したり、首相たる小泉純一郎や東京都知事である石原慎太郎らが、中国や韓国の厳しい批判を受けながらも、毎年のように戦犯を奉り日本の軍国主義化の象徴として名高い靖国神社を参拝したりする現実がある。そして、このような政治家の行動を、大多数の日本国民は、結局のところ認容してしまっている。

1995年の村山首相による「談話」の発表は、当時、不徹底とはいえ日本が戦争責任を自覚し、反省したという評価を生み出していた。しかし、先にあげたその後の首相や閣僚の発言や行動は、結局のところ日本は真に戦争責任を自覚していないという強烈な不信感を東アジア各国に与え、民衆レベルでの激しい怒りを呼び起こしたのであった。日本がアジア諸国、とりわけ中国や朝鮮半島などの東アジア諸国民に対し、侵略戦争を事実として認めたとうて心からの謝罪をあらわし、それに見合った行動をとるなどということは、敗戦後一貫してなかった。そしてこのことが現在、戦争責任を全く自覚しない日本人と、被害者として未だ生々しい記憶の絶えない東アジアの民衆という、互いに理解し合えない関係性を生み出しているのである。

その意味で、日本人と東アジア諸国民との間に存在する歴史認識の深い溝は、日本の敗戦当初から現在に至るまで一貫して続いている戦争責任回避の姿勢から生じているものなの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な姿勢を日本政府が取り続け、それを日本国民がこれからも許し続ける限り、歴史認識問題はいつまでも東アジアにおける重大な懸念事項としてくすぶり続けることは必至である。

5 歴史認識問題と東アジアの平和構築

このままでは今後も歴史認識問題のギャップに基づく日本と東アジア諸国との関係悪化が生じ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いつまでも歴史認識問題にこだわり続ける東アジア諸国に対しては武力を背景にした強圧的な態度も辞さず」といった「極論」も、日本国内では一定の支持を持ってきている。もちろん、多数の国民は極東で戦争が起きることなど望んでおらず、政府も日本が単独で武力を東アジア諸国に向けることができるなどと現段階では考えていない。

ただ、現段階で最も懸念されるのは、歴史認識問題によって不安定化した東アジア諸国との関係を理由に、具体的な危険性が何ら立証されないにもかかわらず、日本国憲法9条を「改正」し、集団的自衛権の名の下に、アメリカと共同した軍事行動を可能とする世論形成が行なわれることである。これは、現在日本のマスコミ論調や政治勢力の配置を見れば極めて現実的であり、実際にもそのような動きが進行している。戦後60年が経過した今日、いままでも解決できなかった歴史認識問題を一挙に解決することは非常に困難である。しかし、歴史認識問題は、東アジア諸国間における平和構築の「基礎」なのであって、真の平和を求めるのであれば、歴史認識問題の解決は不可欠である。このことを、まず、我々日本国民自身が自覚しなくてはならない。

Movement for NSL Abolition

Ho-Chang Song
Lawyer,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1. Current status of the movement for NSL abolition

National Security Law is the product of Cold-war, divided land and dictatorship; a symbol of our past which is stained with blood and tears of us; and thus a target of liquidation to the people living in 21st century. The only option for us to overcome the past of suppression and re-design our future is to abolish NSL. It is because an old law of the past and a horse block toward the future cannot coexist with one another just like the past and the future cannot live together. We simply cannot leave our future to be caught in the trap of NSL and lose its hope any more.

The 17th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very chance to finish the fifty-six-year-old homework though the best chance was last year, when liberals came into power both in administration and in National Assembly supported by the nationwide hope for social reform and liquidation of the past. Even the former political power and the conservative press, who used to uphold NSL and use it for maintaining their vested rights, are agreeing upon the amendment of NSL or peeping at the substitutes as the last resort against the increasing voices. They are still calling North Korea an 'anti-state organization', planting uncertain uneasiness in people's mind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trying to extend the life of NSL which is already brain dead. However, the best mending or any new name can never cure the traces of the miserable past. Therefore, we should keep the evil spirit of the past from undermining the present and thus getting in the way to the future.

Abolishment of NSL is the historical task for the 17th National Assembly to implement in order to be 'the second constitutional assembly'. Experiencing the historic birth labor of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e 17th National Assembly was born a gigantic administration party through the 'election reform' of the people. If they would like to seriously declare a break from the previous ones and revive as the second constitutional assembly, they must begin with abolishment of NSL--a mistake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made on December 1st, 1948. It is the role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to choose whether to stay in the days of contradiction and fetters of old convention or to carry out the historic mission for liquidating the past and creating a new era.

The 17th National Assembly and especially the Uri Party, however, is not playing its minimum role as a ruling party. Since it determined its party platform to abolish NSL, it has been showing overcautious and idle behaviors. It once seemed that the Uri Party tried to organize the internal opinions by establishing an NSL task force, hearing from external advisory groups, opening a general Assembly meeting with a couple of revised bills, deciding the party platform of 'abolition first, revision of criminal law next', etc. However, the 'bill for NSL abolition' was not even brought up for discussion in the Legislation-Judiciary Committee, and is not being dealt with for persuading the citizens. It swings itself rather than responding actively with clear answers to the deceptive color-offense of the Grand National Party claiming that 'NSL abolition is the disarmament toward North Korea' and to the mean trick of the conservative press such as Cho-Joong-Dong (Chosun, Joong-ang, Dong-ah) claiming that 'NSL abolition will let the North Korean flag fly on the Gwanghwamun street'. Besides, only a small number of party members struggles, whereas most of the party members act contrary to the party platform or just sit

as spectators. While the Uri Party spent time meaninglessly, the first opposition party-Grand National Party-equipped itself with Internet, decolorized people's will for reform by temporizing public opinion, concentrated on obstructing the NSL abolition, and thus submitted the 'bill for NSL revision' in the end.

It is nothing but a pathetic excuse to put off the NSL abolition because of the mean political offences of Grand National Party, for NSL abolition cannot be put aside for such a reason. If the Uri Party keeps hesitating with this matter, it will be recorded as the worst error displaying the incompetence of the ruling party, and history will judge the coward behavior for not acting despite the injustice. If the Uri Party overturns the original party platform that they will solve the problem of NSL, it will mean that they deny their identity for themselves.

NSL still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our society as an underlying establishment since its enactment fifty-seven years ago up to the present. The color-offense and ideological propaganda for anti-communism represented by the Grand National Party proves the fact that the life force of NSL is still the same as before, which kept the Uri Party claiming for the reformative side could not cease the life of NSL in spite of the status as a ruling party. The homework of movement for NSL abolition has not yet made any significant viable progress. The fierce tug of war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reformative surrounding NSL abolition was at its best when it met year 2005, and it has come to a lull recently. It is not easy to arrange the positioning of the movement for NSL abolition without having a final conclusion from the political debates. Therefore, we would like to limit the scope of this speech to revisiting the legal issues of NSL, some of its problems in applying to the real world, and history of the movement for NSL abolition.

2. Issues on National Security Law

The problematic aspects of NSL are disclosed when one examines the very history of its enactment and amendment, and each and every line of the law, which has had a number of amendments so far, reflects legal issues and problems of application to real life as they are.

A. Enact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1948.12.1. Act No. 10)

(1) From a temporary law to a permanent law

National Security Law was built in haste five year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law in order to suppress the Yeo-Sun event and get rid of the such powers as the Namrodang party in 1948. Besides, it was a temporary law for the emergent situation. At that time, Mr. Kwon, Seung-ryeol, Minister of Justice, also agreed upon the temporary aspect of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saying, "National Security Law is not a law for the peacetime. Since it is a law for the emergency case, a minor violation of human rights may be sacrificed for the sake of establishment of our country."

It was in the same context that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Mr. Kim, Byung-ro, maintained that 'Since NSL is a temporary law which is controllable under the criminal law, it should be abolished. Enacting the criminal law without abolishing NSL may cause a legal issue of redundancy' when the criminal law was about to be enacted in 1953. For this reason, he worried about the possible invalidity of the corresponding clause due to the redundancy in the course of enactment of the criminal law, and placed an abolishment clause of NSL in the appendix of the criminal law. However, the result of internal voting rejected the

abolition with only ten votes for it, which led to the extension of life of NSL.

(2) Typical evil law at the time of Japanese occupation, the successor of the Act for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National Security Law had also been criticized for, in its contents, taking over the notorious Act for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MPO) which was used to suppres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t the time of Japanese occupation. The similarity between NSL and AMPO can be easily recognized in their expression: NSL clause 1.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who organized an association or society in order to overturn the government by violating the prevailing constitution or to rebel against our country" and AMPO clause 1. "a person who organized an association in order to change the current government body". The most significant similarity between those two laws lies in their purpose of punishing one's philosophy as well as actions. By the way, the degree of punishment was more heavy in NSL than in AMPO.

B. Amendment History of National Security Law

(1) First amendment (Whole sentence amendment 1949.12.19 Act No. 85)

National Security Law had an overwhelming power enough to 'be utilized to exterminate all the left-wing communists at that time' according to a testimony of a former judicial authority. 118,621 people were arrested or imprisoned for violating NSL in 1949 only, and 132 parties or social organizations were forced to dismiss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of the same year. When more than eighty percent of the prisons throughout the country were filled with the left-wings and cases and trials got congested, Lee, Seung-man Administration suggested an anti-humanitarian solution. It included adopting single-trial system instead of triple-trial system, capital

punishment as the prime legal punishment, training detention for correction and ideological conversion, etc. However, the first amendment of NSL was not implemented because the Presidential decree required for setting the implementation date was not enacted.

(2) Second amendment (Partial amendment 1950.4.21 Act No. 128)

First amendment of NSL contained a number of clauses that breach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which included adoption of single-trial system and acceptance of the retrospective validity enabling the punishment of past activities, and the second amendment was conducted to correct those problems. The second amendment of NSL was only a soothing tactic on the critics made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for the presumed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law after the first amendment.

(3) Third amendment (Independent discontinuance 1958.12.26 Law No. 500)

NSL was amended again in 1958, at the closing phase of ruling by the Liberal Party.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was to escape from the crisis of their political power by fettering the opposition parties and press as the ruling party found out that the present government had lost the support of the public especially through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56 and fourth General Election in 1958 after the abandon-four-take-five - that is, rounding off - constitutional amendment made by the Liberal Party for the empowerment of President Lee in 1954. The press took the lead for criticism calling the amendment 'a means to suppress democrats and block up the freedom of speech at their own will', and the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the Democratic Party stood up for full-scale countermeasures such as call for the general meeting of Assembly members and organization of special committee. However, President Lee and his Liberal Party passed the bill for the NSL amendment by keeping congressmen in basement confinement and rushing the bill

through (so called 2 · 4 upheaval).

(4) Fourth amendment (Whole sentence amendment 1960.6.10 Law No. 549)

The Democratic Party empowered through 4.19 revolution, which was initiated by the fraudulent election of the Liberal Party on March 15, 1960, set to an amendment task with the support of public opinion calling for the abolishment of NSL. As a result, the general meeting of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ll for NSL amendment unanimously on May 30, 1960. However, despite the certain accomplishment such as removing poisonous clauses, fourth amendment still had limitation including a new clause on failure to notification.

(5) Enactment of Anticommunist Law (1961.7.3 Law No. 643) and fifth amendment (Partial amendment 1962.9.24 Law No. 1151)

The new Democratic political power, which was empowered by 4 · 19 revolution, tried to enact the anticommunist law to block up the reformative claims and demands regarding to the South-North matter only to be frustrated in the end. The anticommunist law was revived shortly after the military coup d'etat (May 16, 1961). Although some issues were raised with regards to the relationship with NSL while enactment of anticommunist law was in progress, the government preferred the anticommunist law to NSL. Through these steps, the military coup d'etat government could prepare the background for the long dictatorship regime by having the legitimate means in place for justifying enforcement of anti-communism through enactment of anticommunist law.

(6) Sixth amendment (Whole sentence amendment 1980.12.31 Law No. 3318)

Another military government of President Jeon, Doo-hwan also had to depend upon NSL to maintain their political power. The general meeting of Legislative

Council for National Security without democratic legitimacy passed a bill for NSL amendment on December 30, 1980. It took less than five minutes for the meeting to bring up for discussion, explain, and pass the bill. At this time, the punishment clauses of the anticommunist law were absorbed into NSL as they were with even more intense punishment, and expanded scope.

(7) Seventh amendment (Partial amendment 1991.5.31 Law No. 4373)

People's resistance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regime finally achiev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presidential direct election through '6·29 declaration', and obtained pledges for the abolishment of evil laws from each candidate of Presidential Election. After this, demands for NSL abolition were boosted in labor, colleges, religions, cultures, legislation, etc. 214 congressmen from the ruling Democratic Liberal Party submitted the bill for NSL amendment on March 14, 1990, and the opposition Peace Democratic Party suggested a substitution bill. DLP responded with another revision bill on May 7, 1991, and rushed the bill through with other bills on May 10. At this time,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substituted all the procedures including suggestive explanation of the bill, judgement report, revisional suggestion report, etc. with written documents and omitted voting to rush the one-sided approval of the bill. It took only thirty five seconds for this.

C. Legal Issues of National Security Law

(1) Unconstitutionality: It breaches the Constitution of Korea

Each clause of NSL is uncertain and ambiguous, and has rooms for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egal authorities, which causes it to fully breach the peaceful unification clauses (preamble of Constitution, clause No. 4, 66, 69)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Constitution, clause No. 12), to partially breach the freedom of

thoughts · consciousness (Constitution, clause No. 19), freedom of expression (Constitution, clause No. 21), principle of equality (Constitution, clause No. 11), dignity of human kind (Constitution, clause No. 10),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ban on excessive judicature (Constitution, clause No. 37-sentence 2), and finally to exceed the limitation of legislative power (Constitution, clause No. 40). Therefore, it is an unconstitutional law.

(2) Contradiction 1: It is in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in which Korea is a relevant party, especiall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ecome automatically effective in Korea according to the sentence 1, clause No. 6 of Constitu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UN Human Rights Committee are consistently confirming that NSL cannot coexist with clause No. 9, 18 and 19 of the above Covenant, and should be abolished gradually.

(3) Contradiction 2: It is inconsistent with 'South-North Exchange/Cooperation Act' and a number of exchanges ·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aintaining NSL, which assumes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espite the 'South-North Exchange/Cooperation Act' enacted as a legal background to carry out the peaceful unification policy is causing legal conflict and thus deepening chaos in legal system. In other words, current judiciary system depends on the arbitrary decisions of each legal · judiciary organization on a case by case basis without setting clear standards. Also, current government has recently admitted North Korea, a former anti-state organization, as an equally relevant party for the exchange and generated a number of written agreements while it applies NSL to the people, which cannot but drive people to the anomie state.

(4) Redundancy: It overlaps with clauses of the criminal law

If you compare each clause of NSL with criminal law, you will find the crimes which cannot be penalized under the criminal law but can be penalized under NSL. These are nothing but the means for maintaining the dictatorship regime through human rights violation rather than the crimes to be punished for national security. In other words, the punishment clauses for national security are already contained in the criminal law and NSL now has only poisonous clauses for power security. Since NSL abolition will not cause any loophole in national security and the target activities of NSL can be covered by the criminal law only, NSL is not a necessary condition for national security. Those activities that may threaten national security significantly can be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as a rebellion, coup d'etat, etc. This sort of redundancy with the criminal law may bring about confusion in judiciary applicat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two laws, which can result in disfunction of the rules.

ex) Clause No. 3 Crime of anti-state organization establishment · registration: Any person or group of persons who establish or register for an anti-state organization with the purpose of rebellion or external troubles may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punishment clause (criminal law, clause No. 114) on organizer or registerer of organizations with the intention of a crime. Those who do not intend rebellion but prepares for rebellion or conspiracy may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clauses of the criminal law.

D. Problems with regards to actual application of NSL

(1) It has been used as a means of maintaining power security.

NSL was born in 1948 as a means to suppress riot in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a war, and it should have been abolished with the end of the emergency. It was scheduled to be abolished when the criminal law was enacted. Lee government, however, raised the issue of 'national security' based on the reality of divided country in order to extend its life. From then on, dictatorship regimes had used National Security Law as a 'power security law' to maintain the regime. These regimes used NSL to denounce all the challenging expressions and activities for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They did not hesitate to wrongly accus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ctivists by claiming that 'a violator of NSL equals a communist'.

(2) It produced a number of human rights victims.

While NSL has been used as 'power security law' of dictatorship regimes, it violated the basic rights of ordinary people as well as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ctivists, and as a result produced a number of human rights victims represented as prisoners of conscience. Also under the dictatorship regimes, there continued to be debate on legality and human rights violation of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s NSL had been used for bubbling the performance of investigation organizations, maintaining/expanding the public investigation agencies, enhancing anti-communist ideology, etc. Th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course of applying NSL was raised not only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but also in the trial process. The issues related with forcing a confession against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judicature and accepting the admissibility of illegally gathered evidences were always pointed out, and cruel judicature including capital punishment for the political cases was questioned. Those NSL violators who was sentenced a fixed term had to suffer from the continuous maneuver for ideological conversion, unequal treatment, lone-term · solitary

confinement during the term. Even after he was released, he had to endure continuous watch and control tied to the Security Observation Act. This tragedy brought inheriting misery and pains of the involvement system and social inhospitality or discrimination to his/her family, not alone him/herself.

(3) It obstructe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essence of democracy lies in accepting the social pluralism · openness and guaranteeing for the different opinions or claims to coexist. However, while our society has claimed to pursue liberalism and democracy, it would suppress the opposite side with NSL advocating the particularity of the divided land, and put the people's freedom of thought,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ctions for them in jail for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and benefiting the enemy'. NSL has also generated the violent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ublic prosecutors, the police, Defense Security Command, etc., and enabled the gigantic tangible violence--i.e. torture and severity acts.

(4) It has been an obstacle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Since NSL was created as a product of division, it has been playing roles of blocking up free discussion on unification and the efforts of South-North reconciliation, and encouraging hostility and hate even in our society. IT is still defining North Korea, which is necessarily an important entity of unification, as 'anti-state organization' to adhere increasingly to the existing divided state, functioning as an obstacle for the peaceful South-North exchanges, and thus checking the hope for unification.

3. History of Movement for NSL Abolition

The history of movement for NSL abolition started with its enactment. When it was

first brought up to the constitutional Assembly for discussion in 1948, there existed voices which were warning the risk of the law saying, "This law has a risk of arresting any people who make political actions." However, so-called 'National Assembly fraktsiya event' broke out and 13 congressmen who had disagreed the enactment of NSL were punished for violating NSL. We can see that the history of NSL is equal to the history of NSL abuse and of movement for NSL abolition at the same time.

After that, the movement for NSL abolition could not gain power until 1980s, for NSL was so harsh and it did not allow any little question mark on the ruling regime. Everyone had to keep silent and be deaf. Only in the courtroom could people hear the echoless pleas about the harmful effect of NSL. It was when 'The Strikers' Headquarters for NSL Abolition'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1990s that the systematic activities on NSL abolition were initiated. However, the limitation of their activities were so obvious that it could not extend the scope to more than questioning the NSL abuse. The later movement for NSL abolition was also mainly focused on accusing torture and severity acts of public security organizations put to the victims of NSL.

1998~1999 - It was under Kim, Daejoong Administration in the late 1990s that the large-scale movements of NSL abolition or amendment began. As such aspects of NSL as the human rights violation, anti-unification and its abuse examples were not informed to the public, and influence of the conservative was so strong, the movements for NSL abolition in the civil society sector acted as two main camps: [NSL opposition solidarity] that takes a gradual approach to the ultimate abolition through the movements for NSL revisions because of poor subjective · objective surroundings, and [NSL abolition solidarity] claims for the

complete abolition as the partial revision cannot overturn the essence of NSL. The failure factors of this period lied in that it lacked a proper centripetal force due to the division of the movement solidarity, but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including the political competence and public opinion generation were not mature yet.

2000 - 6.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provided the movement for NSL abolition with a new epoch. If NSL is applied appropriately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South-North summit itself was violation of NSL. However, the public security organizations did not apply NSL to the inter-government contacts including South-North high-level talk as well as the summit. This means that NSL already lost the adaptability to the changed reality. Also, South-North summit means an essential change of objective situation from the viewpoint of movement for NSL abolition, for the talk between the government institutes, especially between the heads of the countries, means the change from confrontation and conflict to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However, there was not a significant change in subject conditions of movements for NSL abolition, which was the main reason that the movements were not active. While the movements in each sector had developed into specialization and segmentation since 1990s, movement for NSL abolition was not proper to be led by one sector though it may be a common subject which covers all the strata and classes. Therefore, the positive factors including South-North summit could not develop subject power which can activate the movement using the momentum. Movement for NSL abolition was still no more than the activities of minority victims-related organization.

2004 - Movement for NSL abolition was more active than any other years. NSL had been losing its power since the South-North summit in 2000, and met a fatal crisis with the professor Song, Doo-yul incident in 2003 which gave us motivation of overcoming and reflecting on the anti-communism residing deeply in our society. Moreover, in the course of a process from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to the General Election, reform has risen to the surface as an irresistible task, and Roh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Uri Party could not but claim to wipe the slate clean in order to establish its *raison d'être*. Since the typical action of liquidating the past is represented by NSL abolition, the movement for it faced the best opportunity ever.

Early April, 2004 - The movement solidarity for NSL abolition organized a 'strategy team for NSL abol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movements based on the changing objective political circumstances with the leading organizations of 'Solidarity for NSL Abolition' such as Minbyun and Mingahyup. Besides, 'People Solidarity for NSL Abolition (People Solidarity)' was reorganized composed of hundred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Movements for NSL abolition were expanded through a variety of sectors, and the activities were diversified from monotonous mob assembly to the various cultural events, symposiums, and seminars to approach to the people more effectively.

May 20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rganized a task force team to research for the realities of human rights for the past one year, analyze the gathered data, and hold an 'hearing for NSL' to listen to a variety of experts on NSL. NHRC later published a report named 'Realities of human rights with regard to NSL application'. By this, the issue on NSL abolition was raised by a government organization for the first time, which was an important chance for

the later 'recommendation for NSL abolition' of the Commission.

June - People Solidarity began the wid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forming the necessity of NSL abolition such as bad effects and legal problems of NSL. It utilized both online and offline media to consolidate public opinions through the columns from the various experts, victims, and the seniors, and organized announcement of various public statements and signature campaigns. Minbyun began working to publish the 150-page-long law manual on National Security Law with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August 9 - Minbyun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invited those congressmen who agree upon NSL abolition from each party and held a press interview in commemoration of publishing 'A Guide to NSL Abolition'. This gave a moment for the debates on NSL abolition in a number of forums held in newspaper · broadcasting · seminars, and the legal counselors of People Solidarity focused their efforts on proving the necessity of NSL abolition based on the past research achievements in the forums.

August 30 - While various debates were held on NSL abolition, the Supreme Court commented on 'needs for maintaining NSL' in sentencing for a certain NSL-related case very exceptionally. There was a huge criticism that the judicature challenged the authority of the legislature who is responsible for the question of maintenance or abolition of a law, and there was a counter-criticism that the opinion of the final judiciary organization should be respected. Whether the Supreme Court intended or not, this added oil to the hot debates on the matter of maintenance or abolition of NSL. Besides, later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upporting the constitutionality of NSL and their

assertion on 'necessity of maintaining NSL' grew the debates far more.

September 5 - President Roh, Moo-hyun stressed the necessity of NSL abolition in a television interview that 'NSL is a legacy of old time, and so should be moved to the history museum.' His comment helped the Uri Party reorganize their positioning after the internal debates surrounding NSL abolition matter. President Roh, of course, may have just confirmed his pledges made back in Presidential Election, but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comment is evaluated as significant. From the viewpoint of movement for NSL abolition, this also added power to the revitalization and played the Uri party a critical role in deciding the NSL abolition as party platform a few days later. There is also another evaluation that it hurried too much to collect the various opinions inside.

September 8 - Minbyun wrote an opinion column named 'a criticism on the anti-NSL abolition' and distributed to all the congressmen and press organization, for a counter-logic was needed to respond to the NSL maintenance side.

September 15 - Conservative press bodies including Chosun · Choongang · Donga Daily intentionally exaggerated the assumptive risks of national security after NSL abolition, and disagreed with NSL abolition on papers everyday. Minbyun responded each and every questioning of conservative press with 'a succeeding guide to NSL abolition'.

October 4 - Movement for NSL abolition had made a recognizable accomplishment, and th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raised the public opinions for NSL abolition up to 50 percent. The conservative organizations led by Christian organizations, threatened by the public opinions and political movement, held a

large-scale assembly gathering about 30,000 people. Some conservative right-wing people injured themselves and committed extreme actions at the assembly.

October 17 - The Uri Party consolidated previous achievements and decided 'criminal law amendment after NSL abolition' as its party platform through the general meeting of National Assembly. Through this, the Uri Party clarified its identity and confirmed that the future of the party depended on NSL abolition.

October 18 - However, 'criminal law amendment' of the Uri Party may mean nothing but insertion of the essential 'anti-state organization' clauses--NSL clause No. 2 and 3--in the criminal law, which may make NSL abolition process meaningless. Minbyun raised these issues residing in the party platform of the Uri Party, and suggested 'a bill for criminal law amendment assuming the complete abolishment of NSL'.

October 23 - The positions of the political parties such as Grand National Party, the Uri Party, Democratic Party, Democratic Labor Party, etc. were clarified through the discussions and debates on NSL for the past months, and it was the time to negotiate and compromise based on their own logic. At that time, People Solidarity held the 'people culture festival', and began to review on initiating a demonstration.

October 26 - People Solidarity, organizations for liquidating the past, organizations for press reform gathered and held <Meeting for accusing right-wing Chosun Daily for having promoted public opinion disruption>, and a million people petition movement for NSL abolition was expanded from youth organization-oriented to the movement of the whole people solidarity.

October 30 - Heads of People Solidarity began a demonstration in front of National Assembly, which continued until December 31 despite two times of confrontation with the police to be the centripetal force of later movements of NSL abolition.

November 3 - A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360 human rights activists' declaration demanding NSL abolition, women's action day for NSL abolition, <Discussion forum for NSL and freedom of press>, etc. were held around the strike place in front of National Assembly.

November 4 - <Discussion forum for hopeful future and the world without NSL> led by academic organizations were held, and a joint press interview was held to complete so-called four reform legislation tasks including NSL, press reform law, private school law, liquidation of past law.

November 9 - A prayer meeting of priests and christians for NSL abolition was held at the strike place. Besides, after having a press interview informing initiation of one man demonstration demanding NSL abolition at the strike place, Minbyun continued to conduct one man demonstration until December 31 except for weekends (total 39 times)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National Assembly..

November 10 - After a catholic mass on the situation was held at the strike place, a variety of events including the assembly, prayer meeting, discussion forum, press interview, candle culture festival, film festival, etc. around the strike place, and the demonstration group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for NSL abolition such as street speeches throughout Seoul, subway public relations, etc.

December 1 - Facing fifty-sixth anniversary of NSL enactment, People Solidarity submitted people's petition for NSL abolition with announcement of a declaration named 'Our position toward shamable 56 years of National Security Law', and 56 people of the demonstration group swore the complete abolishment of NSL and had their hair shaved at the strike place, which was followed by a declaration for NSL abolition by 18,000 teachers in the country, a declaration for NSL abolition by European Joint Committee, etc.

December 6 - A 300 people fast demonstration began this day, which later was expanded to 1,500 people as of the end of December demanding NSL abolition to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hand, a bill for NSL abolition got the chance to be selected as a subject of National Assembly meeting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s a congresswoman, Lee, Eun-young, encore the 'proposal of meeting schedule alteration' provided by congressman, Roh, Hoe-chan, proposing to discuss the bill for NSL abolition within the session, but bringing it up for discussion in the Legislation-Judiciary Committee was overruled because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Choi, Yeon-hee, declared adjournment and closing of the meeting.

December 9 - Some congressmen from Grand National Party, through verbal speeches, began color-offense targeted to the congressman Lee, Chul-woo commenting a 'spy' backing up with his past, which reflected a practical problem in which both offender and victim are working as congressmen together and thus only the past of the victim is disclosed so that it led to mutual accusation for defamation of characters. However, GNP draw the backdraft upon itself as criticism on witch hunting-type color-offense increased among public.

December 16 - While GNP's 'spy' comment on congressman Lee, Chul-woo brought about the social anger,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such as People Solidarity,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Mingahyup, Minbyun, etc. held <Forum for testimony on torture · political manipulation of NSL> and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held a <Press interview for announcing examples of suppressing labor union activities and labor movement by NSL> to drive a wedge in the witch hunting-type color-offense of the conservatives.

December 20 - Despite the cold weather lasting for days, the fast demonstration for NSL abolition within the year exceeded 1,500 participants. After this, congressmen agreeing upon NSL abolition made a series of visits to the strike place from the Uri Party as well as from Democratic Labor Party.

December 24 - After a catholic mass and prayer meeting, a 'candle march for NSL abolition within the year' began with a schedule of departing from every region of Seoul and gathering at Gwanghwamun.

December 26 - As the chairmen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Uri Party and GNP discussed the NSL matter in the so-called '4 party talk',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eld a press interview to accuse the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Kim, Won-ki, for rejecting to bring up the matter for discussion and the Uri Party for driving a collusion. Besides, some members of Uri Party throughout the country continued to occupy their office and demand NSL abolition around this time.

December 28 - While a declaration of the senior and a march of the professors

demanding NSL abolition within the year continued, Minbyun conducted a fast demonstration in the Minbyun office for 3 days and participated in a number of activities for NSL abolition.

December 31 - As National Assembly closed its regular session without solving the NSL issue, People Solidarity for NSL abolition carried out official public announcement, press interview, a demonstration visit to the Uri Party, dismissed the strike of the year, and resolved the fight for NSL abolition in 2005.

Present (2005) - Currently, the 'bill for NSL abolition' proposed by congressman Roh, hoe-chan, 'bill for NSL abolition' and 'bill for criminal law amendment' by the Uri Party, and 'bill for partial amendment of NSL' by Grand National Party are held in the Legislation-Judiciary Committee for over six months. People Solidarity resumed the strike in front of National Assembly for the February temporary meeting, but did not make a major achievement. Congressmen who agreed on NSL abolition,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Mingahyup, Minbyun, etc. have been planning the 'hearing for NSL' and already conducted the first hearing in National Assembly. Second and third hearings are under preparation, and the movement for NSL abolition will be revitalized with the opening of the regular National Assembly meetings in September.

4. Conclusion

Conflicts among the political powers surrounding the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are like a mountain for us to climb. Previous ruling powers who have taken advantage of NSL to maintain their vested rights are continuing to distort public opinion using color-offenses. This was an expectable

reaction. However, the problem lies not only in the conservative but also in the Uri Party who claims itself the reformative. Looking at the history of movements for NSL abolition shows that the raison d'etre of the Uri Party is the liquidation of the past and completion of the reform. There is no doubt that the touchstone of it is abolishment of NSL. Nevertheless, the Uri Party is stuck in self-contradiction and is not showing appropriate steps forward. Although they won the majority of the seats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they hesitated to take reformative actions showing their irresolute identity, and as a result lost the majority seats after the special election in 2005.

However, it is certain that National Security Law is just about to pass away. It is making a final struggle and wriggle like there is a final flame before extinction. It is the time that the strong will, passion and fight are desperate to decorate the big end.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변호사 송 호 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현주소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분단, 그리고 독재의 산물이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과거의 상징이고, 그래서 청산의 대상이다. 그 억압의 과거를 딛고 새롭게 설계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은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할 수 없듯이 과거의 낡은 법과 미래로 향한 노둑들이 공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국가보안법의 뒷에 갇혀 희망을 잃게 할 수는 없다.

17대 국회는 지난 56년간 미루어왔던 숙제를 끝낼 수 있는 호기이며 가장 적기는 바로 지난 해였다. 사회 개혁과 과거청산을 원하는 범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개혁진영이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받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십분 활용했던 과거 집권세력과 보수언론마저 점차 고조되는 폐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개정에 동조하거나 대체입법안에 기웃거리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라 주장하며 안보를 빌미로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이미 뇌사상태인 국가보안법의 목숨을 연장하려 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아무리 손질해도, 설령 개명한다고 하더라도 참혹한 과거의 흔적을 없앨 수는 없다. 그렇기에 과거의 악령이 현재를 다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리하여 미래로 향한 길목을 막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제17대 국회가 '제2의 제헌국회'를 꿈꾼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제17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산고를 겪으

며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거대여당으로 탄생했다. 그들이 진정 오점투성이로 점철된 과거 국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제2의 제헌국회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1948년 12월 1일 제헌국회가 잘못 끼운 첫단추- 국가보안법부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한 채 모순과 질곡의 나날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청산과 새시대 창조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인지는 이제 17대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7대 국회, 특히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몫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결정한 이후 열린우리당이 보인 소심하고 안일한 처신에는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한동안은 국보법 태스크포스팀을 결성하고, 외부자문단을 만들어 의견을 청취하고, 몇가지 개정안을 만들어 의총을 열고 '폐지 후 형법보완'이라는 당론을 결정하는 등 당내 의견조율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듯했다. 그런데 정작 반드시 거쳐야 할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법사위원회 논의는 진행되지도 못했고, 대국민 설득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보법 폐지는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이다'라는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색깔론 공세나, '국보법 폐지하면 광화문에 인공기가 휘날릴 것'이라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여론을 호도하는 저열한 농간에 명쾌한 해답을 갖고 적극적으로 응수하기 보다는 질질 끌려 다닐 뿐이다. 더욱이 소수의 의원만이 고군분투할 뿐 대다수 의원들은 오히려 당론을 거스르는 행보를 걸거나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 그렇게 열린우리당이 미적대는 사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인터넷까지 동원하는 파상 공세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들의 개혁 의지를 퇴색시키고 국보법 폐지를 저지하는데 몰두하여 기만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한나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 때문에 국보법의 폐지를 미루겠다는 것은 한심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한나라당을 핑계로 연기할 성격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를 모르고 계속 주저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여당의 무능함을 드러낸 최대 과오로 기록될 것이고, 알고도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겁한 행보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2005년 내에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초의 당론을 뒤엎는다면 이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제정된지 57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뿌리 깊은 기제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수구집단의 색깔공세와 반공이데올로기 선전은 국가보안법의 생명력이 여전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개혁세력임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 집권당의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줄을 쉽게 끊지 못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현재진행형의 과제이고, 아직 가시적 성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수구집단과 개혁진영 사이의 끊어질 듯이 팽팽한 줄다리기와 절정에 이른 가운데 2005년을 맞았지만 최근에는 소강국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종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대해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법률적 문제점과 현실적용상의 문제점 및 그 동안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대한 간략한 경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은 그 제정과 개정의 역사 자체에서 모두 드러나게 되며,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친 현재의 조항 하나하나에서 그 법률적, 현실적용상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가. 국가보안법 제정(제정 1948.12.1. 법률 제10호)

(1)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아울러 남로당 등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형법보다 5년이나 앞서 급조된 법률이다. 더욱이 비상시기 임시적 성격을 갖는 한시법이었다. 당시 권승렬 법무장관도 제헌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이 “평화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이런 경우에 인권옹호 상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한시법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의 중복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형법 제정 과정에서 그 중복성으로 인한 해당조항의 사문화를 우려하면서 형법 부칙에 국가보안법 폐지 조항을 두었다. 하지만, 표결 결과 단 10명만이 폐지에 찬성함으로써 부결되었고 결국 국가보안법은 목숨을 연명하였다.

(2) 일제 강점기 대표적 악법, 치안유지법의 계승자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탄압기제로 악명을 떨쳤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유사성은 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와 치안유지법 제1조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의 표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양자간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행위는 물론 사상 그 자체를 처벌하는데 있다. 그런데, 처벌 형량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이 치안유지법보다 중했다.

나. 국가보안법 개정사

(1) 제1차 개정(전문개정 1949.12.19 법률 제85호)

당시 법무당국자가 ‘좌익공산분자를 박멸하는 소재로 국가보안법을 활용했

다고 토론했을 만큼 국가보안법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1949년에만 118,6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투옥되었고, 같은 해 9-10월 사이에는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당했다. 전국의 형무소에 80% 이상이 좌익수로 넘치는 등 사건과 재판이 폭주하자, 이승만 정권은 반인권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 삼심제 아닌 단심제의 채택, 최고법정형으로 사형제 도입, 교화와 사상전향을 위한 보도구금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1차 개정법률은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다.

(2) 제2차 개정(일부개정 1950.4.21 법률 제128호)

제1차 개정 국가보안법이 단심제를 채택하고 법제정 이전의 과거행위까지 처벌하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등 형법원칙에 반하는 규정이 많아 이를 환원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가보안법 제2차 개정은 제1차 개정 이후 국내외에서의 인권유린법률이라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유화책이었다.

(3) 제3차 개정(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자유당 말기인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었다. 그 목적은 자유당은 1954년 이승만의 권력강화를 위하여 강행한 사사오입개헌 이후 1956년 대통령선거와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의 이반이 거듭 확인되면서, 야당과 언론에 족쇄를 채워 정권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언론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민주주의자를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비판여론을 주도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의원총회 소집과 특위 구성을 통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지하감금과 날치기 수법을 동원해 통과시켰다(소위 2·4파동).

(4) 제4차 개정(전문개정 1960.6.10 법률 제549호)

1960.3.15.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강압적으로 통과된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을 배경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60.5.30.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독소조항의 제거라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를 신설하는 개악이 이루어지는 등 제4차 개정은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었다.

(5) 반공법(제정 1961.7.3 법률 제643호) 제정과 제5차 개정(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1호)

4·19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남북문제와 관련된 혁신적 주장과 요구를 봉쇄하기 위해 반공법을 제정하려다가 좌절하고 말았다. 반공법은 1961.5.16. 군사쿠데타 직후 부활하였다. 반공법 제정 당시 국가보안법과의 관계가 문제되었으나, 정권은 국가보안법보다 반공법을 더 선호하였다. 이처럼 군사쿠데타 세력은 반공법을 제정함으로써 쿠데타의 정당화 근거인 반공주의를 강요하는 법적 수단을 갖추으로써 장기독재체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6) 제6차 개정(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신군부세력인 전두환 정권 역시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1980.12.30.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가보위입법회의 본회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상정·제안 설명·가결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때 반공법의 처벌조항들은 고스란히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되었으며 형량이 강화되고 처벌이 확대되었다.

(7) 제7차 개정(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3호)

1987.6.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마침내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키고 대통령선거시 각 후보자들로부터 악법개폐의 공약을 받아냈다. 이후 노동계·대학가·종교계·문화계·법조계 등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요구가 고양되었다. 1990.3.14. 여당인 민자당 의원 214명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야당인 평민당은 대체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1991.5.7. 민자당은 수정안을 제시했고, 5.10. 다른 법안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날치기로 처리하였다. 즉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수정제의 보고 등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표결절차까지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했던 것이다. 불과 35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 국가보안법의 법률적인 문제점

(1) 위헌성 :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

국가보안법의 각 조항들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법 적용자의 광범위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헌법상의 평화통일조항(헌법 전문, 제4조, 제66조, 제69조)과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상·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인간의 존엄성(헌법 제10조),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침해하고 입법권(헌법 제40조)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법률이다.

(2) 상충성1 : 국제인권조약과 충돌하는 모순법률이다.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특히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보안법은 위 규약 제9조, 제18조, 제19조와 양립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될 법률이라는 것이 국제인권기구, 특히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상충성2 :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간의 각종 교류·협정과 충돌하는 모순법률이다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적대관계

를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것은 법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현재의 법체계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법집행·적용기관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정부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대등한 당사자의 일방으로 인정하여 교류하고 수많은 합의를 만들어내면서 국민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니, 국민들은 적어도 남북관계에서는 법적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4) 중복성 : 형법규정과 중복된다.

국가보안법상 각 조항을 형법과 비교해 보면,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란 국가안보를 위하여 꼭 형사처벌해야 할 행위라기보다는 인권침해를 통한 독재정권의 유지수단에 불과한 것들이다. 즉 국가안보용 처벌규정은 이미 형법에 담겨 있어 국가보안법의 고유성은 정권안보용의 독소조항만이 남는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안보에는 전혀 허점이 생기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은 아니다. 즉 진정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군반란죄, 외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형법과의 중복성은 법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양 법률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죄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폭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내란예비·음모단체이면 형법의 내란예비·음모목적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

라. 국가보안법의 현실적용상의 문제점

(1) 정권 안보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폭동 등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생한 법으로 비상사태의 종료와 함께 폐지되어야 했으며, 또한 실제로 형법이 제정되면 폐지할 것을 예정하고 만든 법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분단현실을 빌미로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그 목숨을 연명시켰다. 그 후 수십 년간 독재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법'으로 악용해 왔다. 이들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자신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모든 표현과 행동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매도했다. 민주화운동세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곧 빨갱이'라는 명어를 씌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2) 인권 피해자를 양산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 권력의 '정권안보법'으로 악용되면서 민주화 운동세력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했으며, 결과적으로 양심수로 상징되는 인권 피해자를 양산했다. 또한 독재정권하에서는 수사기관의 실적 올리기, 공안 수사기관의 유지 확대,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악용되면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인권침해는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발생하였다. 형사사법 기본원칙에 반하는 자백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항상 지적되었고,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사형 등 잔혹한 적용실태가 문제되었다. 형이 확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복역과정에서 끊임없는 전향공작과 처우상 차별, 장기·독방 구금으로 고통받아야 했다. 감옥을 나와서는 보안관찰법에 묶여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를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비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연좌제와 사회적 냉대·차별이라는 세대에 걸친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3)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

민주주의 정신은 사회의 다원성·개방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분단의 특수성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으로 반대파를 탄압하기 일쑤였고, 국민들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와 그 실현 행위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몰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 폭력적 국가기구를 탄생시키고, 그 가공할 유형적 폭력의 행사, 즉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능하게 하였다.

(4) 평화통일의 걸림돌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산물로 탄생하여, 이후 자유로운 통일 논의와 남·북간 화해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마저 적대와 증오감을 조장하는 분단법제로 기능해 왔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 주체일 수밖에 없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분단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평화적인 남북 교류의 장애물로 기능하면서, 통일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

3.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경과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역사는 그 탄생과 함께 시작된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헌국회에 상정되었을 때부터 국회 내에서는 "속담에 고양이 쥐를 못 잡고 씨암탉을 잡는다는 격으로 이 법률을 발표하고 나면.....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이라며 이 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제정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1949년에 그 발언을 했던 의원을 비롯하여 제정에 반대하던 13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소위 '국회프락치 사건'이 발생한다. 국가보안법의 역사가 곧 국가보안법

악용의 역사이자 동시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역사로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1980년대까지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 만큼 엄혹하였고, 집권자에 대한 일체의 문제제기도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입에 재갈을 물고, 귀를 막고 있어야만 하였고, 다만 법정에서만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해 메아리없는 항변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조직 활동이 시작된 것은 90년대 초반 '국보법 철폐 범국민 투쟁본부'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 조직의 활동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였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이후 90년대 말까지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초점은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공안기관의 고문 기타 가혹행위에 대한 고발에 맞춰졌다.

1998년, 1999년- 본격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내지 개정운동이 추진된 것은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이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아직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반통일성 그리고 그 악용실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하고, 공안기관을 비롯한 수구집단의 위력이 막강했던 시절이라, 시민사회영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1)열악한 주·객관적 상황을 이유로 폐지보다는 개정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까지 나아가자는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와 2)국가보안법의 본질상 부분적인 개정으로는 미온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완전철폐를 주장하는 [국보법 철폐 국민연대]로 양분되어 활동하였다. 이 시기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운동진영의 양분으로 인한 주체적 동력 저하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치적 역량과 여론형성 등에서 아직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2000년 - 6.15남북공동선언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가보안법이 평등의 원칙에 맞게 제대로 적용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러나 공안기관은 정상회담은 물론 남북고위급 회담 등 정부간 접촉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변화된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 상황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국가기관 특히 정상간의 회담은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의 국면이 화해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주체적 여건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이 당시 운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주 원인이라 하겠다. 90년대 이후 각 부문의 운동이 보다 전문화, 세분화되어 발전한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모든 계급·계층을 포괄하는 공통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문에서 주력군을 자임하기에 곤란한 영역이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운동을 활성화할 주체세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였다. 여전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소수 피해자관련 단체의 활동에 그치고 만 것이다.

2004년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된 해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점차 위력이 약화되어가던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반공주의에 대한 극복과 성찰의 계기가 되었던 2003년의 송두율 교수사건으로 그 폐지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된다. 여기에 대통령선거와 탄핵국면을 거쳐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했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사 청산을 전면으로 내걸 수밖에 없었다. 과거청산의 대표적 상징조치가 국가보안법 폐지인 이상 국보법 폐지운동은 더 없이 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004년 4월 초 -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진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가협 등 과거 '국가보안법 철폐연대' 활동을 주도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변화된 객관적 정세에 바탕을 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모색하기 위한 '국보법 폐지 전략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수 백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를 재결성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각 부문별로 확산되고, 활동방식도 기존의 대중집회를 통한 규탄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행사, 심포지움, 토론회 등을 통한 범국민적 홍보활동으로 변화하였다.

5월 20일 -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티에프팀을 구성하고 1년 동안 인권실태를 조사한 끝에, 그 동안의 조사 성과를 집적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국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후 '국보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로써 국가기관에 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최초로 이루어졌고, 이후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권고결정'을 내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6월 -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의 폐해와 법률적 문제점 등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활동방식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동원하여 각계 전문가, 피해자, 사회원로의 기고문과 인터뷰를 실어 공론화하고, 각계의 성명서 발표와 서명운동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민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공동으로 150쪽 분량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해설서 발간작업에 착수하였다.

8월 9일 -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으로 국회에서 각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찬성의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보법 폐지 해설서' 발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 논쟁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신문·방송·학회 등에서 각종 토론회가 개최되고 토론회에서 국민연대 측 법률전문가들은 그 동안 연구성과를 기초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8월 30일 - 한창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 각계의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특정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국보법 존치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를 둘러싸고 법률의 해석기관인 사법부가 법률의 존폐에 관한 전권이 있는 입법부의 권능에 도전한 것이라는 비판과 법률의 최종적 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는 대법원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존폐논쟁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국보법의 존치필요성'을 역설하여 논란을 가중시켰다.

9월 5일 - 노무현 대통령은 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국보법은 구시대 유물'이므로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발언하여 국보법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까지 국보법 존폐를 둘러싸고 당내 혼선을 빚고 있던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일거에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사항을 다시금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으나 정치적 의미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보법 폐지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한편으로 운동의 활성화에 동력을 부여하여 실제 며칠 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다른 한편 여당 내 각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일찍 서둘러 봉합한 것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9월 8일 - 민변은 '국보법 폐지반대론 비판'이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체 국회의원들과 언론기관에 배포하였다. 8월에 발간된 해설서 이후 국가보안법 존

치론자들의 논리적 반발에 대한 대응 답변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9월 15일 - 곧이어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악의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후 국가안보의 붕괴를 과장선전하며, 연일 지면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보수언론들이 제기하는 각각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국보법 폐지 해설서 후속'을 발표하였다.

10월 4일 -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그 홍보활동의 결과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거의 50%에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위기의식을 느낀 기독교계 주도의 보수단체들은 3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보수우익 성향의 사람들은 자해를 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10월 17일 - 지금까지의 성과를 모아 열린우리당은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으로 당론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공식천명한 것이고, 열린우리당의 당운이 국보법 폐지에 달려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10월 18일 -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당론 중 '형법보완'의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인 제2, 3조 '반국가단체'조항을 형법에 도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자칫 국가보안법 폐지를 무용한 절차로 만들 위험이 있었다. 이에 민변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서 '국보법의 완전한 청산을 전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10월 23일 - 국보법 존폐에 관한 수개월 동안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국보법에 관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들의 입장은 명확해졌고, 이제는 서로의 논리를 기초로 협상과 타협을 해야 할 시점에 돌입하

였다. 이 때 국민연대는 '국민문화제'를 개최하였고, 농성 돌입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10월 26일 - 국민연대와 과거청산 단체, 언론개혁 단체가 모여 <국론분열조장, 극우신문 조선일보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국가보안법폐지 100만 청원운동이 국민연대 사업으로 이어져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10월 30일 - 국민연대 지도부가 국회 앞 시국농성에 돌입하였으며 이 농성은 두 차례의 경찰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까지 이어져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구심점 구실을 하게 되었다.

11월 3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 360명의 선언 발표와 국가보안법폐지 여성행동의 날, <국가보안법과 언론자유 토론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활동이 국회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1월 4일 - 학술단체가 중심이 되어 준비한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 희망찬 미래를 여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과거청산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제 완수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11월 9일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성직자 및 기독교인 기도회가 농성장에서 열렸다. 또한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이후 민변의 1인 시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12월 31일까지(총39회) 국회 정문 앞에서 계속되었다.

11월 10일 - 천주교 시국미사가 농성장에서 열렸으며 이후 11월 한 달 동안

각계각층이 모여 집회, 기도회, 토론회,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영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농성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농성단은 서울 시내 전역의 거리 연설회, 지하철 홍보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2월 1일 - 국가보안법 제정 56주년을 맞아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치욕 56년을 맞는 입장'이란 성명 발표와 함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농성단 56인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결의하며 삭발식을 농성장에서 진행했다. 이후 전국교사 1만 8천명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유럽 공동위원회 성명발표 등이 이어졌다.

12월 6일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300인 국민단식농성이 이날 시작되었고 이 단식농성은 12월 말 1천500명까지 불어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에 촉구하게 된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자는 노회찬 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이은영 의원이 재청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의제로 채택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곧바로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휴회, 산회를 선언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 법사위 상정은 끝내 무산되었다.

12월 9일 -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철우 의원의 과거 전력을 들어 '간첩' 운운하며 색깔공세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과거행적에 대해 전혀 진상규명되지 않은 채 공존하는 현실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서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계각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녀사냥식 색깔공세에 대한 비판이 높아져 한나라당은 오히려 역풍을 자초하게 되었다.

12월 16일 -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이 사회적 분노를 불

러일으킨 가운데 국민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변 등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고문·용공조작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노동조합활동 및 노동운동 탄압사례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수구세력의 마녀사냥식 색깔공세에 쐈기를 박게 되었다.

12월 20일 - 연일 계속되는 흑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단식농성은 1500명을 돌파한다. 이후 국회 앞 농성장은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폐지를 동의하는 의원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12월 24일 - 시국미사와 기도회를 비롯해 저녁에는 서울 각 지역에서 출발, 광화문으로 모이는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촛불 대행진'이 진행되었다.

12월 26일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장 및 원내대표가 모인 소위 '4자회의'에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김원기 국회의장 규탄과 야합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을 규탄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한 이날을 전후로 전국 각지의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며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점거농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2월 28일 -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촉구하는 사회원로선언, 교수단 행진 등이 진행되며 민변은 자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민변 사무실에서 2박 3일 간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종 활동에 결합하였다.

12월 31일 - 국회가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폐회됨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는 입장발표 기자회견, 열린우리당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농성을 해산하며 2005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결의하는 것으로 한 해 국가보안법 투쟁을 마무리한다.

2005년 현재 - 국회 법사위에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개정안',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중일부개정안' 등이 6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국민연대는 2월 임시국회를 맞아 다시 국회 앞 농성을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였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민변 등은 '국가보안법 청문회'를 기획하여 국회 내에서 1차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2,3차 청문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4. 결론

국보법 존폐를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피할 수 없는 산이다. 국가보안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과거의 집권세력들은 끊임없이 색깔논쟁을 통해 국민여론을 호도해왔다. 이는 당연히 예상되던 반발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수세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세력임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에 있다. 국보법 폐지운동의 경과를 살펴보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존립근거는 과거청산이고, 개혁의 완성이다. 그 시금석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자중지란에 빠져있고, 적시에 적절한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총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의 다수당이 되었음에도 과단성 있는 개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냈으며, 그 결과 2005년의 국회의원 보충선거를 통해 과반수 의석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마지막 숨통이 넘어가기 직전에 있음이 분명하다. 완전히 새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일으키듯이 국가보안법은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대미를 장식할 강력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투쟁이 절실한 때이다.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and Contemporary Japanese Issues: The Postwar Machinations of the Special Political Police Officials

Tadashi Yanagase, Executive Director

League Demanding State Compensation to Victims of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May 11, 2005

1

Japan was ruled by emperors until 1945 when it accepted the Potsdam Declaration and surrendered unconditionally.

Police responsible for public security, known as “the emperor’s police,” followed the supreme command of working as the emperor’s right-hand man. Anyone who defied the police were considered to have defied the emperor, and were mercilessly arrested and put in detention for a maximum of 29 days under the 1885 Police Offense Summary Regulation or the 1908 Police Crime Punishment Law. The people were deprived of all their liberties and rights by the 1900 Security Police Law and other repressive legislation.

Since the birth of the modern police, the political police were at the center of the regime. Those in charge were the high police, and it was the special political police which in 1911 expanded the security apparatus and became an independent entity. These were the so-called special political police (SPP), one of the world’s three major infamous secret police organizations along with Nazi Germany’s Gestapo and the the Soviet Union’s GPU.

The 1925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was the major law of several that oppressed the citizens by clamping down on those who oppose the “national polity.” In 1928 the government worsened this law by making capital punishment the maximum penalty, further increased the hold of hugger-mugger politics, and drove the people toward war.

The SPP applied brutal repression under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against people who opposed the war of aggression, sought peace, and worked to make the citizens the sovereigns. Without obtaining warrants for suspected violations of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the SPP would jump people on the street, or charge right into private residences and take people into custody, search homes, and seize personal effects. Such events became everyday occurrences.

It was common for arrestees to be kept in detention for 29 days at one police station, then transferred to another and still another, resulting in long-term detention. The torture was beyond description. Police would handcuff detainees behind their backs and hang them upside down, then beat them with clubs and bamboo swords. They would throw water on detainees, and inject water into their noses through rubber hoses. They would stick awls and needles into detainees’ thighs. They would press hot irons on detainees’ bodies, plunge parts of their bodies into boiling water, and commit other appalling acts. It was common especially for women to be shamed by stripping them naked. Their forelocks would be pulled out, and

the police would kick and stomp on their bellies, saying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have children. Many women had clubs rammed into their vaginas.

Author Takiji Kobayashi's novel *March 28, 1928* described SPP torture in detail. Kobayashi was taken to a police station and died seven hours later. His body had large bruises on the temples, and scars in other places, plus subcutaneous bleeding. From his abdomen to his knees he was completely covered in front and back with mixed Indian ink and Indian red. His thighs were swelled to about twice their normal size and had 10-odd holes apparently made by large nails or needles, exposing his flesh. His penis and testicles were swelled to abnormal size and were reddish-black due to internal bleeding. His right index finger was bent backwards and completely broken, with the fingertip resting on the back of his hand.

After political activist Nobuharu Nishida was arrested no one knew what happened to him, and nearly 30 years after his death it was found that the police had buried him in a public cemetery as an "unknown victim killed by an unknown criminal."

Social activist Shigeki Ueda was arrested in 1932, but to this day no one knows what happened to him.

There is much testimony about the torture and humiliation imposed by the SPP.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was meant to control "people whose purpose is to change the national polity," and its target was expanded steadily from the socialist movement to encompass also the labor movement, the peasant movement, and the culture movement, and further to lawyers, students, intellectual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more. It is estimated that in Japan alone the total number of people arrested and imprisoned was well over 100,000. Of the arrested, over 80 were cruelly murdered in police station jails, 114 died in prison of torture and abuse, 1,530 died in prison of illness, 75,681 were booked, and 5,162 were sentenced to prison.

Colonies were also made subject to the law, and the death penalty was carried out in Korea.

The SPP officials not only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Many of them also had positions with the Imperial Rule Assistance Association and other organizations, and played direct roles in driving the people to war.

Indeed, repression under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and promotion of the war of aggression were integral.

2

After the war, what happened to these criminal SPP officers and the officials who directed them?

Having accepted the Potsdam Declaration, Japan's government was in a position obliging it to consider establishing democracy, and respecting freedom and basic human rights, and the occupation authorities indicated that they would seek this. But Iwao Yamazaki, who was minister of home affairs in the cabinet of Prince Higashikuni, said in an interview

with a foreign wire service that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and SPP would continue in existence. On October 4 GHQ asked for Yamazaki's dismissal, and it sought the dismantling of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regime in a memorandum entitled "Removal of Restrictions on Political, Civil, and Religious Freedoms." Other members of the Higashikuni cabinet expressed the same view as Yamazaki, and resigned en masse. This shows that although the government at that time said it had accepted the Potsdam Declaration, it was attempting to maintain the emperor-centered "national polity."

At GHQ's order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was abolished, political prisoners were released, and the SPP were dissolved. Only those people who held such jobs at the time were affected. Most of the lower-ranking SPP were obliged to resign, while the SPP officials who directed the police received "suspension" instead of "dismissal" or "retirement." Their past experiences were not questioned.

One example of this is that of Shigeo Nakagawa, the principal in the brutal killing of Takiji Kobayashi, who became a patrolman with the Metropolitan Tokyo Police Office, and because of his service record when assigned to the SPP Section he climbed the promotion ladder to sergeant, assistant inspector, inspector, and to police superintendent. At the time the SPP was dissolved he had an administrative position as the mayor of Tokyo's Itabashi Ward. He later became chairman of the Kita Ward Board of Education.

In February 1946 a purge from public office was ordered, and for SPP officials it applied to those who held office between July 1937 and September 1945. Repression under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as seen by the number of people sent to the prosecutor's office according to government statistics had 71,103 people up to 1936 and 4,578 after that. Takiji Kobayashi was killed in 1933. It was easy for criminals in power, who had engaged in the most horrible brutality, to slip through the net.

What is more, US global strategy shifted with the 1947 Truman doctrine (a communism containment policy), and in 1948 that changed its policy in the Far East. Japan was seen as "the Far East bulwark" against communism, and politicians schemed to rearm Japan and amend its constitution. This was the agenda that hastened the release of war criminals and cancelled the public office purge.

Some SPP officials remained in government service by slipping through the net cast by GHQ in October 1945 for dismissal, or by avoiding the public office purge. Added to these were the people who returned to public office after the purge was cancelled. They assumed many important posts. Some of these were undersecretaries of Home Affairs, Health and Welfare, Labor, Education, and Defense, secretary-general of the Fire Defense Agency, 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uperintendent-General of the Metropolitan Police, director of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ttee, director of the National Defense Council, and many other directorships. They are also found among members of the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¹

¹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ostwar activities of the SPP officials, see: Yanagase,

Former prewar cabinet members including Nobusuke Kishi, Mamoru Shigemitsu, and Okinori Kaya moved into politics, and SPP officials made their way into politics as other former bureaucrats did. Fifty-four SPP officials became Diet members (they include people such as Saburo Asari, director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y all preached democracy while advocating the "revival of what we lost during the occupation."

Encouraged by calls from across the Pacific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rearmament, what they tried to achieve included reviving the Meiji Constitution, emperor worship,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armament, conscription,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governor appointment system, centralized police system, illegality of the Communist Party,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rescinding the Basic Law on Education, reviving the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moral" education, state-compiled textbooks, support for Yasukuni Shrine, and granting honors and decorations to survivors.

SPP officials lurking inside and outside the Diet, including political and bureaucratic circles, serve as the linchpin for realizing these objectives, which include a variety of things such as those accomplished, those not yet accomplished, things like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Bill which were prepared but are currently not among the objectives, and things like the Yasukuni Shrine Bill, on which they have persevered.

Another big help for achieving these goals is the Japan-US alliance built around the Japan-US Security Treaty.

3

Almost everything about the reactionary drift created by SPP officials in league with right-wing politicians, thinkers, and academics creates problems for us.

Of course many SPP officials are deceased or no longer active in society, but their direct successors collaborate with those who keep the pot boiling, and devote themselves to the revival of everything "lost" during the occupation.

A typical example of this is the attempt to make damaging changes to the constitution. It was Nobusuke Kishi, Mamoru Shigemitsu, and other war-criminal politicians who were the first to promote the cause of impairing the constitution. But the many SPP officials in this vein who worked har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cluded Hisatada Hirose, chairman of the Independent League of Diet Members for the Constitution, and Iwao Yamazaki, chairman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Yamazaki is the man who precipitated the collapse of the Higashikuni cabinet with his insistence that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be preserved. After cancellation of the public office purge, he became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worked hard

Tadashi, *Busted! Political Police Officials in the Postwar Years* (2005) (in Japanese).

to rally Diet members who were former SPP officials to promote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when the LDP was founded as a conservative coalition, he became the first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chairman.

In 1956 the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was created as an affiliate agency of the cabinet, and Yamazaki was played the lead role in legislation at the instance of House members. However, due to the refusal of the Socialist Party to provide council members, a year after it had been decided to establish the council, no members had been appointed, and it did not even have a chairman.

Yamazaki then became chairma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dget Committee, and quit the chairmanship of the LDP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but out of obsession with his cause he went so far as to quit the Budget Committee chairmanship to return to his place at the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and finally managed to hold meetings. The council worked for seven years and in July 1964 issued a huge report.

While the focus here has been on Yamazaki's obsession, many SPP officials appeared on the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In the mid-1950s the pro-amendment factions such as the Independent League of Diet Members for the Constitution and the LDP Constitutional Research Council vied with one another to produce amendment proposals. The changes that these proposals shared included rewriting the preamble, changing the emperor from a symbol to the head of state, shifting from the renunciation of war to sanctioning war in self-defense, and restrictions on basic human rights.

These constitutional revision goals are almost all carried over by today's pro-amendment camp.

Another representative example is deleterious changes to the Basic Education Law and the textbook issue.

The organization behind these two issues is the LDP Liaison Council on Education Problems, whose chairman over the approximately 20 years from 1983 was the SPP official Seisuke Okuno, a man who was a lightning rod for criticism because of his remarks. When he was minister of justice he resigned because of his "promoting constitutional amendments" statement, and he resigned his post as 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Land Agency for remarks that glorified and affirmed aggression. As chairman of the "Coalition of Japanese Diet Members for a Promising Japan" he made remarks about the wartime comfort women issue such as "[The women] were participating in commercial activitie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didn't force [the women] into this." The man with the historical perception revealed in these statements has the central position on this council.

In 1953 Shigeo Ohdachi became minister of education. Together with permanent vice-minister Yoshio Tanaka and Shin'ichi Ogata, secretary-general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Bureau, these three formed an SPP trio which quickly led education in a reactionary direction. The Diet was the scene of attacks on "ideologically slanted education" and textbooks, while teacher control was promoted, public elections for boards of

education were eliminated, and steps were taken to strengthen the minister of education's authority.

At that time Tanaka and Ogata appointed Iwao Takayama to the Certification Committee. Even if other committee members granted approval to a textbook, passages on which Takayama had expressed an opinion were persistently send back for rewriting, causing shudders of fear in textbook people. Takayama was the chief ideologist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In the postwar years he continued advocating the need for collective security.

The ideological current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gave preferential treatment to people like Takayama, gained strength from political backing by the LDP and other entities, and this became the trend that led to approval for the *New History Textbook*, which paints the "Great East Asian War" in favorable colors.

4

During the 20 years under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the SPP officials directly committed crimes of authority and drove the people into a war of aggression.

Encouraged by the citizens' weak postwar effort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of authority, they took an emboldened stance that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 was necessary, concealed prewar evils, and have even tried to revive them.

Currently the successors of the war-criminal politicians and SPP officials not only glorify the war of aggression, but also occupy themselves busily with trying to center the nation around the emperor and transform Japan into a war-making nation.

America's Bush administration is trying to bring about global joint action through the Japan-US alliance in order to achieve world domination through unilateral action and preemptive attacks, and it therefore has great expectations for Japan becoming a war-making nation.

To give our descendants a country that does not make war, we must once again raise our voices over Japan's war of aggression and call to account the criminals who committed offenses against humanity.

The 23rd UN General Assembly in 1968 enacted the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11, 1970. Although Japan abstained on the convention's enactment and has not ratified it, Japan can of course not avoid its application.

We shall broaden our movement for a reckoning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o as to build true solidarity with other Asians and to achieve true happiness for the Japanese people.

治安維持法犠牲者国家賠償要求同盟* 中央常任理事

* League Demanding State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the Public Order Maintenance Laws

柳河瀬 精(やながせ ただし)

1

1945年、ポツダム宣言を受諾して無条件降伏するまで、日本は天皇が統治する国でした。

治安担当の警察では「天皇の警察官」たちが、天皇の股肱として働くことを至上命令としました。警察官に逆らうものは、天皇に逆らうものとして、違警罪即決例(1885年)、警察犯処罰令(1908年)で容赦なく捕らえられて、最大29日間拘留されました。国民の自由や権利は治安警察法(1900年)をはじめとする弾圧諸法ですべて奪われていました。

近代警察が発足したときから、国事警察=政治警察を体制の中心におきました。担当する係りは高等警察でした。その治安機構を拡充し分離独立したのが特別高等警察(1911年発足)です。ナチスドイツのゲシュタポ、ソ連のゲーペーウーとともに三大秘密警察として世界に悪名をとどろかせた特高です。

1925年、制定された治安維持法は、「国体」に反するものを取り締まるとして、国民を弾圧する諸法の中心柱でした。1928年、最高刑を死刑にすると改悪し、暗黒政治をいっそう強めて、国民を戦争へと駆り立てました。

特高警察は侵略戦争に反対し平和を求め、国民主権の時代をめざした人々にたいして、治安維持法によって残虐な弾圧を行いました。治安維持法違反容疑の令状などは取らず、路上で襲いかかったり、屋内へ土足で踏み込んで身柄を拘束する、家宅搜索し私物を押収するなど日常茶飯事におこなわれました。

捕えられれば29日間の拘留で警察署を次々にたらいまわされ、拘留期間が長期にわたることは日常的でした。拷問は言語に絶するものでした。うしろ手に手錠をかけ逆さにつるし、棍棒や竹刀で殴る。水を浴びせる。ゴム管で鼻の穴に水を注ぐ。錐や畳針を太ももに突き刺す。焼ゴテを体に押し付ける。熱湯へ身体の一部を突っ込むなど凄惨なものでした。特に女性は裸にして凌辱することが日常茶飯事で、前髪を引き抜かれる、子どもを産めない体にしてやると下腹を蹴られ、踏みつけられ、多数の人が性器に棒を突っ込まれています。

著名な作家小林多喜二は小説『一九二八年三月二八日』で拷問の様子をつぶさに描いています。小林は警察署に捕えられて7時間後に絶命しました。遺体のこめかみには大きな打撲傷を中心に数箇所の傷跡があり皮下出血していました。下腹部から膝にかけて墨と紅がらをまぜて塗りつぶしたように前も後ろも一面に覆わ

れていました。大腿部は二倍ほどにふくれあがり、太い釘か畳針で突いたらしい穴が10数か所あり、肉が露出していました。陰茎も辜丸も赤黒い内出血で異常にはれあがっていました。右手の人差し指は反対に折り曲げられて完全骨折し指先が手の甲にとどきました。

西田信春は警察に捕まった後、消息は不明でしたが、「犯人不明傷害致死事件被害者氏名不詳者」として警察が遺体を処理して共同墓地に埋葬していたことが、死後30年近くたって突き止められました。

上田茂樹は1932年に警察に捕まった後の消息が今日になっても一切不明のままです。

特高警察がおこなった拷問・陵辱についてはたくさんの証言があります。

「国体ヲ変革スルコトヲ目的トシ」た者を取り締まることとした治安維持法の対象は次々に広げられ、社会主義運動はもとより、労働運動、農民運動、文化運動をはじめ、弁護士、学者、文化人、宗教団体などにまで及びました。逮捕、投獄された総数は日本国内だけで10数万人と推定されています。これら逮捕者のうち警察署の留置場で虐殺された者80人余、獄中で拷問、虐待が原因で獄死した者114人、病気で獄死した者1530人、検挙された者が7万5681人、実刑を受けた者5162人です。

植民地も治安維持法の適用範囲とされ、朝鮮半島では死刑が実施されています。

特高官僚たちは人道に反する犯罪を重ねただけではありません。多くのものが大政翼賛会などの役職について、国民を戦争に駆り立てる直接的な役割もはたしています。

まさに侵略戦争推進と、治安維持法弾圧は一体をなすものでした。

2

これらの犯罪者すなわち特高警察官や、指揮していた特高官僚は戦後どうなったのか。

ポツダム宣言を受諾した日本政府は、民主主義の確立、自由と基本的人権の尊重を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でした。占領当局もこれを求める方針を示していました。ところが、東久邇内閣内務大臣山崎巖は、外国通信社のインタビューで治安維持法・特高警察は存続させると答えたのです。10月4日、GHQは名指して山崎の罷免を求め、「政治的、市民的および宗教的自由の制限除去」と題する覚書で治安維持法体制の解体を求めてきました。東久邇内閣の閣僚たちは山崎と同意見だといって、総辞職しました。これは当時の政府がポツダム宣言を受け入れたといいながら、天皇中心の「国体」を存続させようとしていたことを物語るものです。

GHQの命令で治安維持法は廃止となり、政治犯は釈放され、特高警察は解体されました。対象となったのは、その時点で、その職にあったものだけです。下級の特高警察官の大部分は退職させられました。指揮者であった特高官僚たちは、

「免官」でも「退官」でもなく、「休職」となりました。過去の経歴は問われなかったのです。

ひとつの例を挙げれば、小林多喜二虐殺の「主犯」格であった中川成夫は東京警視庁の巡査となり、配属された特高課における活躍ぶりで巡査部長、警部補、警部、警視と出世階段をのぼり、特高警察解体のときは行政職で東京都板橋区長でした。彼はのちに東京都北区教育委員長となっています。

1946年2月、公職追放が発せられました。特高官僚についていえば「1937年7月から1945年9月」の間、職にあったものが対象とされました。治安維持法弾圧を政府統計の検挙送局者数をみると1936年までが7万1103人、それ以後が4578人です。小林多喜二虐殺は1933年です。残虐を極めた権力犯罪者たちが網の目を潜り抜けることはたやすいことでした。

しかも、1947年の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共産主義封じ込め政策）で、アメリカの世界戦略が転換され、1948年、極東における政策も転換されて日本が共産主義に対する「東洋の防波堤」と位置づけられ、再軍備と憲法改定が画策されます。その方針で、戦犯釈放が早められ、公職追放が解除されます。

1945年10月のGHQ「罷免」の網の目を逃れ、あるいは公職追放を免れて官界に残った特高官僚がいました。そこへ公職追放を解除されて官界に復帰した者たちが加わって、次々に要職についていきます。その主なものは、自治・厚生・労働・文部・防衛各事務次官、消防庁長官、警察庁長官、警視總監、中央労働委員会事務局長、国防会事務局長をはじめ局長級には多数います。国家公安委員にもなっています。

（註）特高官僚たちの戦後については柳河瀬精著『告発！戦後の特高官僚』（2005年刊）で詳述しています。

岸信介・重光葵・賀屋興宣など戦前の旧閣僚たちが政界へ進出します。特高官僚たちも、他の官僚出身者とともに政界進出をはたします。国会議員となった特高官僚は54名います。（このほかに朝鮮総督府警務局長の経歴がある浅利三朗などもいます）彼らは一様に民主主義を唱え、「占領期に奪われたものの復活」を主張しました。

侵略戦争をおしすすめたものたちが、海の向こうからの「改憲、再軍備」の声にも励まされて復活をめざしたものは、憲法、天皇崇拝、日の丸・君が代、軍備、徴兵制、内務省、知事任命制、中央集権的警察制度、共産党非合法化、治安維持法、教育基本法廃止、教育勅語、「修身」教育、国定教科書、靖国神社奉賛、生存者叙位叙勲etcです。

これら目標は、政界、官界をふくめ国会内外でうごめいた特高官僚たちがひとつの軸になって、実現をめざします。この目標のなかには、彼らの思惑通りに実現したもの、実現できていないもの、「内政省」法案のように準備しながら、今では目標から除外したもの、「靖国神社法案」のように執念を持ちつづけているもの、さまざまです。